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0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소상공인 · 자영업자 살리기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0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 규제혁파 | 금융선진화 | 중소 · 벤처기업 육성 | 경제활력 |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주거복지

0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사회 | 부동산 정상화 | 미디어개혁 | 노동개혁 | 연금개혁

0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아이 | 청소년 | 청년 | 엄마아빠 | 어르신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양성평등 | 반려동물

0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 국익우선 외교 | 튼튼한 안보국방 | 일류보훈

0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희망사다리교육 | 과학기술 선도국가 | 문화예술체육강국

0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 | 기후환경위기 대응 | 원자력발전

0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국민안전 | 안심먹거리 | 범죄예방 · 피해구제 | 국민건강지킴

0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경제활성화 | 건강한 지방자치 | 교통혁신 | 농산어촌 발전

10 국정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혁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사법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세대 · 대상별 맞춤공약 20

한 눈에 보는 심쿵약속 · 59초쇼츠 449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소상공인 · 자영업자 살리기

소상공인 ·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3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즉각 가동 40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41
임대료 나눔제 추진 4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3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44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 47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48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추진 49
백신 · 치료제 강국 도약 50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5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56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3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57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고용위기 대응 강화 58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구인 · 구직난 해소 59

규제혁파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61
디지털금융 혁신 위한 금융규제 개선 62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 정비 및 활력 제고 63

금융선진화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마련 65
1천만 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6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강화 68

중소 · 벤처기업 육성

중소 ·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71
벤처기업스톡옵션제 개선 72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결 73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74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75
중소 · 벤처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76
중소 · 중견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 7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78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활력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 81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 위한 시스템 확립 ---- 82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 여성 창업 지원 ---- 83
해운 · 조선산업 성장 통해 신해양강국 재도약 ---- 84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85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86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89
생계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 90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 91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화 ---- 9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 93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 상향 ---- 94

주거복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97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 98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사회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 103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 104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 105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106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 부정 방지 ---- 107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 108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 ---- 109
장애예술인의 공정한 활동 기회 보장 ---- 110

부동산 정상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113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 114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 116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 117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 118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119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 120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 122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 123

미디어개혁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 125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 126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127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노동개혁

근로자와 경영진에게 모두 유리한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 129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추진 ····· 130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131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 132

연금개혁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 135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아이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139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140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141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142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14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144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 146

청소년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149
위기 청소년 보호 ····· 150

청년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153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154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155
청년도약계좌 도입 ····· 156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157

엄마아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 159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60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 확대 ····· 161
산모 · 태아 · 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 162

어르신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및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 165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166
100세 사회 건강 · 주거 · 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 ····· 167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 168

장애인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 171
장애인 이동 ·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 172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 173
장애인의 방송 · 문화 · 체육 이용 환경 확대 ····· 174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175
발달 지연 ·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17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177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178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181

양성평등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 183

양육비 이행 조치강화 ····· 184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확대 ····· 187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 191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 192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 193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 19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 ····· 195

국익우선 외교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197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 · 중관계 구현 ····· 198

한 · 일 김대중 –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 199

한 · 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 ····· 200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 202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 203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 실천 ····· 204

재외동포청 신설 ····· 205

사이버안보 시스템 구축 ····· 206

튼튼한 안보국방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209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북핵 · 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 210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212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 213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 214

일류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 ····· 217

보훈 사각지대 해소 ····· 218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 ····· 219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추진 ····· 220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희망사다리교육

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225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 226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 227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228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 229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 230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231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 ····· 232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233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과학기술 선도국가

초격차 · 초연결 ·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 235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236
주력산업 발굴 · 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238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 239
국가 R&D 설계 개편 240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242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244

문화예술체육강국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구축 247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248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249
K-컬처 콘텐츠기업 지원 250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251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252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국민 스포츠권 보장 253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 체육재정 확대 254
전국 차박 명소 1만여개 발굴 및 개방 255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 확대 259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260

기후환경위기 대응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26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64
사전예방적 관리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 제공 265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가능 발전 도모 266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 267

원자력발전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 추진 269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270
한미원자력동맹 강화, 원전수출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271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적극 개발 272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국민안전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277
신속 ·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278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280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에 예방 281
해양영토 주권 수호 282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283

안심먹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미래 식품산업 적극 육성 285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범죄예방 · 피해구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287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288
권력형 성범죄 근절 ---- 289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구제책 마련 ---- 290

국민건강지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293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 ---- 294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 296
지역의 부족한 응급 ·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 297
의료 · 돌봄 맞춤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 298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 · 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 299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 300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경제활성화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육성 ---- 305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 306
지방 과학기술 주권 시대 개막으로 지역자생력 강화 ---- 307
지역 중 – 고 – 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 308

건강한 지방자치

이주활성화지역 지정 통해 지방소멸 방지 ---- 31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통해 지역중심 문화자치시대 ---- 312
이장 · 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 ---- 313

교통혁신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시대 ---- 315
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 316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환승 허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으로 개발 ---- 317

농산어촌 발전

농업직불금 확대해 중소가족농을 두텁게 지원 ---- 319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 320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 321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 경감 ---- 322
의료 · 교육 ·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323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철저 예방 ---- 324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 325

국정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혁신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 329
여성가족부 폐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 ---- 330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 331

디지털 플랫폼 정부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 333

사법개혁

전문법원 설치 확대를 통한 국민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 ---- 335
국민의 법무 · 검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실현 ---- 336
공수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으로 정상화 ---- 337
경찰 처우개선 통해 치안 역량 강화 ---- 338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설립 ---- 339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 340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정책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세대·대상별 맞춤 정책을 통한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우리아이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전담전문의 안심진료 확대
- 어린이집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초등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초중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2. 청소년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 청소년기부터 여성 생식건강 증진
-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프로그램 구축
- 스쿨폴리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신속 ·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특성화고 등 통해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3. 청년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 복원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공정채용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농직불제 도입 등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4. 엄마아빠

- 출산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 → 3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3일 → 7일) 확대
- 임신 ·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일하는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 도입



5. 어르신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30만원 → 40만원)
-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100세 사회 건강 · 주거 · 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
- 주택 다운사이징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요양 – 간병 가족돌봄 휴가 · 휴직 기간 확대 등 간병비 부담 완화
- 디지털 취약 계층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구축
-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6. 장애인

-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 장애인 이동 ·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 장애인의 방송 · 문화 · 체육 이용 환경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발달 지연 ·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 보장



7.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영 · 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양육 ·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8. 보훈가족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 보훈심사 기간 단축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 ·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



9. 소상공인·자영업자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임대료 나눔제 추진
- 자영업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세금 · 임대료 ·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 세제 지원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등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10. 중소·벤처기업인

-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지원 대폭 확대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옥션)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등
- 중소기업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 대폭 확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 중소 · 벤처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기업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



11. 노동자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근로자와 경영진에게 모두 유리한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추진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



12. 농축어업인

- 농업직불금 확대해 중소가족농 두텁게 지원
-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 경감
-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강화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의료 · 교육 ·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철저 예방
-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13. 문화예술체육인

-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과학기술 · 예술 융합 문화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K-컬처 콘텐츠 기업 및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육성
-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 확대
-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14. 과학기술인

-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 집중 투자 및 민간 투자 적극 유도
-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등
- 대학, 연구소, 기업 공동 활용 가능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주력산업 발굴 · 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등 도입
-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추진기구 정비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소상공인 · 자영업자 살리기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즉각 가동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임대료 나눔제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01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 현실화 필요**
– 현 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

▶ **불완전한 손실보상으로 인해 보상 금액, 대상자 누락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필요**

약속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

0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시키겠습니다.

현재

▶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IMF 상황과 같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지원 필요**

약속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예, 현재 캠코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사업 규모 5배 이상 확대)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03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등을 설치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재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원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못하여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존재**
-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간 폐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중 · 장기적 정책과 전략 마련 필요

약속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중 · 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및 조치**
-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다양하고 합리적 방역조치 수립
-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없이 영업 지속 가능한 방역친화적 구조 및 시설 지원

04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금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

– 매출이 감소하며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고정비용과 세금 등의 연체와 부담이 누적되면서 폐업 발생과 위기 증가

약속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 전기 · 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05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전통시장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찾기 어려우며, 배송 불편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통시장 상인들의 대부분은 담보력도 낮고 신용도도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음**

▶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소비 · 유통환경이 비대면 ·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온라인 유통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약속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

▶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조성, 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 (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등

06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 피해액 약 16조 6,000억원 추산, 2019년 대비 매출 62% 감소, 관광 분야 일자리 약 8만 4,000개 증발**
- **고용 창출, 내수 촉진 필요**
- **코로나19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대중관광에서 소수 개별관광으로 변화시키고, IT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킴**

약속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
-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자원 등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
-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추진
- 백신 · 치료제 강국 도약

01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 **현정부가 원칙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 장기화**

▶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로나19 DB는 물론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함**

▶ **준비 안된 위드코로나19로 코로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 급증**

약속

▶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19 극복 집권 100일 계획**
-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실행
-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

▶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

▶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집중 지원**

02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행위(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특수시설이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을 설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재난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재난적 의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
  – 평시에는 일반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위기상황에서는 감염병 시설로 전환

약속

-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
  –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
  –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해 평상시 확보 및 운영
-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 국가 전체 필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한 공공정책수가 적용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하여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정책수가)를 지급해 핵심인력(의사, 전문간호사) 이탈 방지, 유경험자 추가투입, 병상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 확보
  –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03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서 국민들이 입은 백신접종 관련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
-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뿐만 아니라, 향후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할 필요**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추진**

약속

-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추진**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 후정산
  –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 정부 예산,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

04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 · 치료제 강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 **한국은 6개 백신이 임상시험 중이나 임상3상 시험 중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미국 워싱턴대학과의 기술협력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지원(2,500억원) 백신으로 정부지원과는 무관**

▶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도 크게 부족한 상태**
– 한국 건강 관련 연구비는 6.6조원으로 미국 216조원의 3.1%에 불과

약속

▶ **백신 · 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
–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 확대

▶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국가 R&D 확대**
– 백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체 유전자분석 실시 및 백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 마련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 규제혁파 | 금융선진화 | 중소 · 벤처기업 육성 | 경제활력 |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주거복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좋은 일자리

-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3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 고용위기 대응 강화
-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구인 · 구직난 해소

01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표출되며 국민, 특히 청년에게 좌절을 주고 있음**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

약속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조성**
-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혁신, 안정적 국민경제 운용과 지역발전
-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 ·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역동적 혁신성장 뒷받침
-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02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 다양화 및 노동이동 증가**
- 유사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일일 근로자 등)의 비중 증가
- 자영업자에서 피용자로 또는 피용자에서 자영업자로의 이동 가능성 증가

▶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등은 잦은 일자리 이동, 역량개발 시간 부족 등으로 낮은 직업훈련 참여율, 높은 중도탈락률**
- 근로환경을 고려한 훈련방식 도입과 분산된 지원사업의 통합, 수요가 높은 창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 필요

약속

▶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역량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교육 · 향상훈련 실시 등 패키지로 연계 · 추진

▶ **참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연계통합 훈련프로그램 도입**
-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시간, 장소 등의 유연한 적용과 활용 지원
- 모듈식 훈련, 온라인 – 오프라인 연계훈련 등 통합훈련 프로그램 개설

▶ **창업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 창업 준비 시 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자금조달 관련 지원
- 창업 운영 시 사업 정착 · 유지, 세무, 노무관리, 고객관리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사업전환 및 폐업 시에는 업종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등 지원

03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3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성 강화와 재생에너지와 연계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

▶ **태양광 풍력 발전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중. 특히 태양광은 중국 등에 비해 글로벌경쟁력이 취약. 풍력은 국내시장 규모 협소와 투자비 규모가 커 불리한 여건**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수소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 · 후방 생태계 취약**

▶ **에너지의 청정화 · 분산화 · 디지털화로 새로운 사업모델이 구현되는 중, 우리나라는 산업 · 시장 구조 경직성 등으로 해외 전문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사업 참여 기회 부족**

약속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
- 디지털시대에 맞는 AI와 에너지융합 육성

04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위기,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 녹색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중장년 근로자들이 이런 시대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음**
-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협력사와 종업원들에 대한 대비도 시급**

약속

- **산업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 디지털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인력과 협력업체 종업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 근로자 – 지역이 연계해 노동전환 종합지원계획 수립하는 시스템 구축
- **산업별 · 지역별로 노동전환서비스 제공**
  - 산업별 · 지역별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전직 · 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저숙련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

05 고용서비스를 혁신하여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실행도구로 IT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
-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의 종류가 다양 · 복잡하고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도움 없이 이용하기 어려움**
- **대부분 지원금 중심이며 기업 서비스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적극적 구인서비스 개발과 적용 노력도 부족**

약속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인공지능(AI)과 공공과 민간의 고용노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일자리매칭 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 구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개별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구직자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
-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 중소기업에게 인재 채용 지원, 일자리 질 개선, 근로자 교육훈련, 일터 혁신,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시행
-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기존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
  - 고용센터 인력 확충 등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여건 조성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규제혁파

-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 디지털금융 혁신 위한 금융규제 개선
-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 정비 및 활력 제고

01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산업분야도 성장과 정체, 퇴보의 도전적 환경에 놓여 있음**

▶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등의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해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부 지원사업 실시가 필요**

약속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 촉진**

▶ **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으로 세계3대 유니콘 강국 달성

▶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 도서 · 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 **코로나19로 확대되는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신산업 육성**
– AR, VR, 메타버스 등 비대면 교육시에도 학습효과 극대화 위한 혁신 지원 및 정부 구매 계획 수립
– 무인화, 비대면화로 발생하는 정보취약계층 격차 해소 지원 강화

02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국내 빅테크 기업도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부문으로도 업무를 확대**

▶ **최근 발생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

▶ **이에 따라 빅테크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

약속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 (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AI ·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03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여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범위 (혈족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
*전경련 여론조사, 친족 범위 국민인식 조사
3촌(34.3%) · 4촌(32.6%) · 직계가족(11.6%) 순 (2021.9)

▶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 이에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약속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금융선진화

-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마련
- 1천만 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강화

01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대응으로 관련 산업의 진흥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및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

▶ **특히,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 제반 시스템 완비 및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마련 필요**

약속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先정비 · 後과세 원칙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 · 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02 자본시장 선진화로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습니다.

현재

▶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여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 토대 마련**

약속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추진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0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기준 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

▶ **가족사칭 메시지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피해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 필요**

▶ **금융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

약속

▶ **과도한 예금 – 대출금리 격차 해소**
–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

▶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 설치
–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책임 강화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 ·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 벤처기업스톡옵션제 개선
-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결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 중소 · 벤처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 · 중견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01 중소 · 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현재

▶ **중소 · 벤처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험난하고, 창업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중소 · 벤처 · 중견기업은 현실도 미래도 불투명**
– 중소기업은 정부 예산과 공공조달의 보호에 머물러 피터팬증후군을 겪고, 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규제에 묶여 성장의 기업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음

▶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중소 · 벤처 · 중견기업의 자생력 강화, 끊어진 성장사다리 복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양적 질적 도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필요**

약속

▶ **중소 · 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
–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 적용
– 정부의 지원 역할 강화 · 실리콘밸리형 모델 활용

▶ **중소 ·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 성장에 절대 필요한 자금조달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 성실 실패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중견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과 육성**
–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02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벤처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공하고 있으나, 스톡옵션 행사 시 낮은 비과세 한도와 누진소득세율 구조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함**

약속

▶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03 중소기업의 물류대란과 공급망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물류 사태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 코로나19로 세계 운송사 구조조정, 경제회복으로 물류대란 심화

▶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수입 리스크 증가**

약속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 국적 해운선사 활용한 주기적, 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 지원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재고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 지원,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 지원

▶ **공급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합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

▶ **특정 국가의 의존도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추진**

04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수출 과정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외상거래가 많아 수출대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무역 보증과 보험 지원 조치 강화 필요한 상황**

▶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상승 상황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 시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금융지원 연장 요구 증대**

약속

▶ **수출 이전 단계(수출품 선적 전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관련,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과 수출대금 현금화를 위해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 수출 관련 원활한 자금조달로 기업경영 환경 개선, 근로자 후생 강화 촉진

▶ **수출 외상거래 후 기업이 해외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피해보상 확대**
–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 기업 보호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22년 3월 이후 중소기업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연장해 기업의 파산 방지**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 대폭 확대**
–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 적극 지원으로 재도약 지원

05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돕겠습니다.

현재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중소기업 승계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
–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단순 이전이 아닌 종합적 경영 능력 이전 과정

▶ **가업승계 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 관련 정책 부족 등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려워 우량 장수기업의 폐업과 매각 위험**

약속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보다 단축

▶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死前)증여제도 개선**

06 ESG 경영 지원 강화로 중소 ·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현재

▶ **기업경영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반영한 ESG 확대가 뉴노멀인 상황에도, 중소 · 벤처기업의 대응 역량은 부족한 상황**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업 부담 가중과 경영 압박으로 작용**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 등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생존 차원의 맞춤형 대책 마련 시급

약속

▶ **중소 · 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기업이 협력 중소 · 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 ESG 관련 다양한 대 · 중소 ·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07 중소 · 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인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
– OECD 평균에 비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활용 등의 비중이 크게 낮고, 인더스트리 4.0 등 생산설비의 스마트화도 뒤처짐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필요**

약속

▶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
– 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 · 중견기업 보급, 확산 지원**

▶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융자 지원 규모 확대
– 로봇 · 센서 등 핵심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 · 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 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시 세제지원으로 확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지원확대

0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 · 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 대 ·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심화로 양극화 문제 해소 필요성 증대
-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생산성 격차 등이 강한 임금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2020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35위, 인력생산성 50위로 평가
- 중소기업과 근로자, 관련 단체들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필요성 증대

약속

-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지원시스템 도입해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양 산업 및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대비 산업 · 노동 · 금융 · 세제 · R&D 지원정책 포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활력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 위한 시스템 확립
-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 여성 창업 지원
- 해운 · 조선산업 성장 통해 신해양강국 재도약
-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01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습니다.

현재

▶ **4차 산업혁명, 5G 6G 가속화, 디지털 · 비대면 경제 확산,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수퍼사이클' 진입,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구도 심화**

– 미국의 투자 유치 강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유럽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제도 · 예산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하며 경제안보 차원으로 접근

약속

▶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 미래차,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 로봇, IoT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 **실효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대책 마련**

– R&D 및 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 전력 · 공업 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 경쟁국 수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시스템 정비

▶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 반도체 · 컴퓨터공학과 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
– 석 · 박사급 반도체산업계의 전문인력 확충
–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반도체 교육

▶ **주요국들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

02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제2 요소수 대란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현재

▶ **글로벌 패권 경쟁, 무역 갈등으로 요소수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며, 원자재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
–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초점이 기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

▶ **요소수 외에도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변화, 미래먹거리 산업 경쟁 등에 따라 핵심 원료 및 부품의 공급망을 예측하고 신속 대응해야 할 상황**

약속

▶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 기술 · 안보 · 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
–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해 대응

▶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 **공급망 재편 관련 전후방산업 내 중소 · 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강화**

03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 여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 여성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

▶ **벤처 생태계 규모 및 다양성 확대와 유니콘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가야 할 필요**

약속

▶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 · 여성창업 지원 강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 및 다양성 대폭 확대**

▶ **벤처기업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빠른 안착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 자금 투자 활성화
– 스케일업 및 회수 시장에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확대를 통한 딥테크 (첨단기술 기반)스타트업 및 벤처 육성

04 해운 · 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현재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7%를 운송, 국가 비상시 전시물자 수송 등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추적 역할**
- **IMO(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항해선박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불가피**

약속

-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 · 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 **항만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 **선진국형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 해중생태공원, 해양수변공원, 해상아쿠아리움 등 블루투어리즘 강화

05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 유턴기업 선정 요건과 세제 지원 요건이 상이해 요건 등 완화 필요
  – 2015~2019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업은 20건에 불과

약속

- **사업장 신 · 증설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행) 국외 사업장 양도 · 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 · 증설 완료하는 경우로 세제 지원
-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06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자 · 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강화**

▶ **디지털통상 등 통상환경 급변, 선진국이 디지털 무역협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

– 인도 등 신남방 지역, 신북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 대한 차별화된 디지털 통상정책 필요

약속

▶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수립 및 추진**

▶ **새로 구축되는 디지털 통상질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제도정비, 실무형 인재양성 등 디지털 통상질서 기반 구축, WTO 전자상거래 협상 주도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차원의 전략적 대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생계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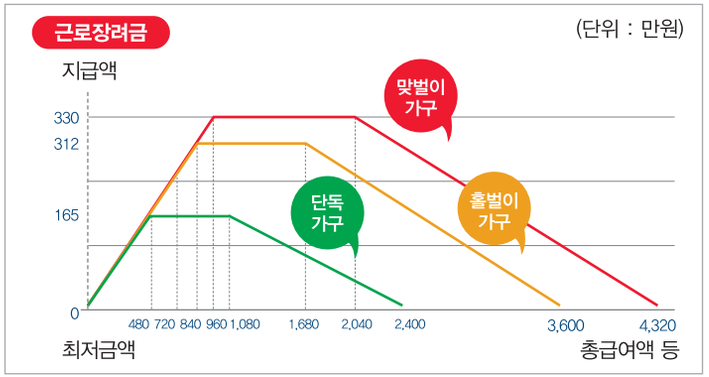
01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빈곤(중위소득 50%) 사이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 미흡**
- **일할 기회 제공과 함께 일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필요**

약속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 상향



구분	현재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가구원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최대 지급액 (10%, 20% 상향)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2,400만원	165만원 (10% 상향)
홑벌이가구	3,000만원	260만원	3,600만원	312만원 (20% 상향)
맞벌이가구	3,600만원	300만원	4,320만원	330만원 (10% 상향)

02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전반적인 복지확대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빈곤층이 소외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소득환산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광범위함**
-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약속

-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03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 **엄격한 선정기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 노출**
-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대처에 미흡**
  –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불확실성 증가. 모든 국민의 재난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 필요
-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지원할 필요**

약속

-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 확대
  – 주거용 재산 기준 폐지, 금융재산 기준 상향
  – 선지원 · 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 긴급복지 지원 인력을 확대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
  –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 지원 기간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
- **사회보장 관련 정보 간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 복지정보, 국세청 ·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 자료 등 모든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해 생애주기별 특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게 관련 복지제도 사전 정보 제공,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개발
  – 단전 · 단수, 카드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서비스 제공

04 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현재

▶ **데이터 기반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인터넷 환경, 디지털 기기 보급,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양성 등) 구축이 시급함

▶ **디지털,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화 필요**

약속

▶ **사회서비스 디지털 현황 진단 및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의 디지털 업무 환경 진단
- 사회서비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SOC 지원방안 설계 및 단계별 추진
-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댐 구축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디지털 역량 제고 교육 확대**

▶ **스마트 복지시설 선도사업 및 전국 운영 확대**
- 스마트 복지시설 표준 서비스 개발
- 스마트 복지시설 전국 운영 확대

05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가인드라인 준수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필요**

약속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양시설 간 인건비 가이드라인 단일화 개선
- 소관 부처간 임금 차이 합리적 교정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재가 및 시설), 생활복지사(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인력의 임금체계 개선(치매노인 간병 등 업무 강도 고려)
- 강도 높은 돌봄 제공 시간 낮추고, 시급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돌봄 인력 고용

▶ **사회서비스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권역별 지원기구 설치 고려)
-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 지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쉼과 회복을 위한 안식월제도 지원

06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현재

▶ **기부 참여율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필요**

약속

▶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 20%

– (1천만원 초과) 30% → 35%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주거복지

-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01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2년 연속 매매가격 상승률 추월**
– 2020년 전세가격 상승률(14.24%) 〉 매매가격 상승률(13.81%)
– 2021년 9월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9.97%) 〉 매매가격 상승률 (9.74%)

▶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월세 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 저소득 ·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

▶ **2021년 5월 기준 평균 월세가격은 73만원, 연간 약 876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액 한도(750만원)를 상회. 월세액 한도를 현실화 할 필요**

▶ **월세는 소득 중 · 하위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임차 형태인 만큼 월세액 공제 확대는 중 · 하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

약속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인
– 소득공제율 확대 : 40% → 50%
– 공제액 한도 : 300만원 → 400만원(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2배 상향 : 7천만원 이하(10 → 20%) /
5,500만원 이하(12% → 24%)
– 年 월세액 한도 : 750만원 → 850만원

02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69만호(2020년)로 전체 주택재고량의 7.8% 수준**
- **전체 가구의 3.7%가 상가, 공장, 여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
-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 수준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 수준이 낮음**

약속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건설임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호당 면적 규모를 확대하고,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개선
  -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대신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2/3 이하)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체계적인 입주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대기자명부 제도 정착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 지급(이사비 등에 사용)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주거비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 (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1인가구 분리 기준 나이 인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사회 | 부동산 정상화 | 미디어개혁 | 노동개혁 | 연금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사회

-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 부정 방지
-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
- 장애예술인의 공정한 활동 기회 보장

01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

–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조국(자녀)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섬

– 교육부가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복잡한 대입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함

약속

▶ **대입제도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02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현재

▶ **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 특정인에 대한 특례제도와 가산점 제도가 있어 논란**

▶ **노조의 고용세습, 편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 전 · 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이 자주 발생**

▶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직권조사와 상시단속이 미약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처벌에 한계**

약속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
- 채용시험 출제 ·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 · 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 점검 강화, 직권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03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 **플랫폼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노동법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노출**
- 플랫폼종사자 규모 220만명 이상 계속 확대, 1인 자영업자의 수 400만명 이상
- 단기적 · 집중적 소득활동에서 장기적 · 지속적 직업활동으로 전환 추세임에도 직업활동에 걸맞은 계약규칙, 노동규칙 부재

▶ **청년 실업률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한시적 아르바이트(알바)에 내몰리는 상황**
- 알바는 대부분 한시적 · 임시적 일자리로, 단기의 기간제 및 파트타임 형태가 대부분

약속

▶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 구체화

▶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열정페이, 휴가 및 휴일 미부여 등 청년알바에게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만으로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확대

04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현재

-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정량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적용해 사회 경험자의 진학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 **신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지만, 입학 후 생활고 때문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음**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필요성에 대한 여론 성숙**

약속

- **다양한 사회 경력자 선발 추진**
  - 입시 전형에서 과도한 정량지표 평가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자격 등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 자율성 확대
  -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입학을 보장하여 대학간 위화감 해소
  -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하여 입시 과정에 외부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입시 부정 로스쿨은 3진 아웃제와 관계자 파면 등 강력하게 제재
-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장학금 지급제도 마련 등**
  - 장학제도를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하여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
  - 지원 방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기저리 대출
  - 일정 과목에 대한 학점 공유제 도입을 통해 등록금 인하 유도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기존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 · 야간로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 도입
  - 미래형 로스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합격자 비율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조인 수급 상황과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05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23.2%(2017년) → 30.1%(2019년)로 증가
  - '기부단체 등을 불신하여 기부하지 않았다'는 비율 역시 8.9%(2017년) → 14.9%(2019년)로 증가
-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 필요**

약속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 · 지출 투명성 제고**
  - 현장 · 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 강화
  - 사업별 ·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국민 검증 강화
  -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적격지출 증빙 의무화
- **불투명 · 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
  - 회계부정 · 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

06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

현재

▶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와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역할 조정 필요**

▶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됨에도 불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필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 6개 법률 도입 · 운영 중

▶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약속

▶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 추진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사전 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추진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07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 가중**

– 상생협력법에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있지만, 요건 복잡, 대기업과 거래단절 우려로 집행이 저조

▶ **향후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 시에도 납품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등 대책 필요**

약속

▶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대행협상 활성화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08 장애예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장애예술인은 약 3만2천명으로 추산되지만,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의 표현 욕구와 문화활동 욕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9.0%이지만,
장애예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 중 58.1%

▶ **장애예술인 활동공간과 여건이 미흡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전문공간은 이음센터, 전문공연장(2022년 개관예정) 2개 불과,
숙식형 창작스튜디오 전무

▶ **장애예술인 활동은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아 생태계 조성이 미흡**

*장애인문화예술단체 가운데 10곳만 국고 보조금 사업, 88%는 공모사업

약속

▶ **장애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 거점 국공립 문화시설에 창작활동 관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
– 비장애예술인과 교류협력 제도

▶ **장애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예산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활동기반 및 작품유통기회 확대**

– 과학기술 융합 창작활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 프로그램 개발
–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유통기회 확충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부동산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01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 **과도한 재건축 · 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큼**

▶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

약속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 ~ 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 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02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재인정부 5년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됨**

▶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

▶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도 필요**

약속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항목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편익
현행	50%	25%	15%	10%
개선(안)	30%	30%	30%	1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개선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
- 리모델링 수직 · 수평 증축 기준 정비

03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현재

▶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임. 그러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층간소음과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69 ~ 226%로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약속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 포함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 마련

04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필지별 소규모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 기반 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

▶ **부정형의 필지 단위 개발 시 주차장 확보는 여건상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낮아 사업자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이 없는 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가 적음**

▶ **문재인 정부는 2·4대책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 수익성 등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음**

약속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축 허용
–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인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05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 악화**
-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
-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차등화되는 등 시장 질서의 혼란 야기**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 상승**

약속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0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
-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지원제도 축소와 규제 강화 등 민간임대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떠넘김**
  - 정책 불신으로 인해 민간임대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

약속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계층혼합(social mix)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07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 세 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음**

약속

▶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 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 **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08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자산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들은 금융지원이 필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구매와 주거 상향 이동을 제약하고 있음**

약속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 ·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09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2010년의 27배 초과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순)**
-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시, 내국인 대비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
  -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음
  - 또한, 다주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능
- **선진국들에서도 특정 도시 및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약속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디어개혁

-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01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현재

▶ **현정부 들어 가짜뉴스 규제 등을 핑계로 비판 언론 억압·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

– 기존 언론사, 시민단체, 언론학계 등 다수의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가 대표적 사례

▶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정정보도 위치' 등 논란 지속**

약속

▶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 · 신장하는데 최선**

–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 보장

▶ **언론 책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산업 진흥 위한 제도적 노력**

– 기금운용, 지배구조 등의 현실화 및 각종 규제 완화·철폐

– 재승인·재허가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02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국민을 위한 진짜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국민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
– 언론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은 실정

▶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 의식 팽배**
– 공영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공영방송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약속

▶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
– 경영평가 기준을 재확립하고 공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개발
– 경영평가 결과를 국민이 접근하기 쉽게 공개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ESG를 포함**
– 공영방송이 보도를 포함하여 환경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유도
– 사회적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

▶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 마련**
–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03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 **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산업적인 정책기조가 불명확**
–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 성과 미미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 마련 필요**
– 중·장기 정책 개선뿐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

▶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
– 진흥의 대상으로 설정 못하고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가 상황 악화시킴

약속

▶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
–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 모색
–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

▶ **디지털 언론미디어 복지정책 강화**
– 全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 보장을 통한 언론미디어 보편적 서비스 구현
– 중고교 언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로 다양한 매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함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개혁

- 근로자와 경영진에게 모두 유리한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추진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01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 어려움**

▶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근무시간 · 근무장소의 해체, 성과 중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응 필요**

약속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 ~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

▶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
–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 **정규직을 유지하며 '풀타임 ↔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조건 조성**
–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전환 신청권 부여
– 재택근무제, 텔레워크, 모바일워크 등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

▶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02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 **아직도 일부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발휘는 미진**
-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만 높을 뿐 노사의 자율적 협력과 연대성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은 민주화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분야 경쟁력은 줄곧 최하위 수준

▶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노사 간 정보공유 및 참여와 협력 기능은 미약**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여 상생 경험을 공유하고, 책무성을 발휘하여 갈등과 격차를 최소화하는 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약속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노사관계 전문가를 조정담당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노사갈등 조정능력 제고
-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장기화 예방

▶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
- 대기업 집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선도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 공무원 · 교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마련을 통해 원활한 노조 활동 보장
-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 확립

03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 **직무 · 성과와 동떨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개선 없이 지속됨으로써 보수의 공정성과 성과혁신 동기 저해**

▶ **세대간 ·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확대로 연공급 임금체계가 중장년 조기퇴직 압박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

약속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 동시 구현**

▶ **직무 ·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 임금정보공시 내실화로 직무 중심 노동시장 발달 촉진
-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 확대

04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현재

▶ **여성고용률이 증가했지만, 근로환경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에서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음**
– 출산, 육아 등으로 풀타임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은 일자리의 질이 낮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 **남녀구직자 71.8%는 일자리가 안정적이라면 "연봉보다 워라밸 선호"**
– 최근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

약속

▶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일자리 선택기회 제공**
–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 야근, 회식 등의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육아 등 가족과의 시간 확보

▶ **기존에 시행되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 개선**
– 현행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로 채용되어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근로 유형으로서 또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문제 야기
–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동안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새로운 근로유형 보급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연금개혁

•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01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안정, 지속가능성, 형평성 차원의 어려움 직면**
–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
– 현재 9%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의 2030세대 연금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 필요

▶ **문재인 정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하고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음.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되어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는 상황**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에 대해 상반된 국민여론 존재

▶ **연금 다층체계를 통한 사회적 ·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약속

▶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 **연금개혁 방향**
– MZ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 – 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 1인 1국민연금(의무화)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 확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아이 | 청소년 | 청년 | 엄마아빠 | 어르신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양성평등 | 반려동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아이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01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현재

▶ **핵가족화, 맞벌이 일반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 증대**

– 정부의 육아지원과 공공 및 민간의 보육 서비스 양적 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인증 아이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대기자가 많은 상황

약속

▶ **부모 자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며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양육수당 수령가정,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돌봄 이용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

– 국가인증 매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질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아이돌보미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

–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0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2013년부터 만3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약속

▶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

▶ **만3 ~ 5세 유아 어린이집 · 유치원 누리과정 안내 · 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 만3세 유아부터 국가가 어린이집 · 유치원 누리과정 등록 체계적 안내
- 만5세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안내 및 관리 강화

▶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 만3 ~ 5세 누리과정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누리과정 만5세 담당 유아 · 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과정 제공
- 유아교육 · 보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공동지침과 메뉴얼 개발

03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는 단순 돌봄 위주로 운영되는 등 수요자(아이, 학부모)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
- 지역사회 내 다른 돌봄시설 이용 시 이동 거리, 공간 등의 문제가 있고, 사교육 의존 증가로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이용률이 낮음

▶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양질의 돌봄,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개선하고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약속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 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 복습, 예체능, 어학, 과학 등)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
-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설치
-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 · 적성 · 특별활동 (예체능, 어학, 과학 등)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에서 제외
-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연계 운영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부모 부담 대폭 경감**

04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 관련 정보 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해당 플랫폼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정보를 찾기 어려움**
- **돌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부모의 돌봄 정보 접근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수요 – 공급 조절을 통한 보육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사용 필요**

약속

-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 모든 유형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장소 · 이용가능시간 · 인력정보 · 대기자정보 · 서비스지원기준 등 통합적 정보 제공
  - 클라우드 기반 AI 맞춤케어 시스템 통해 가정 · 아동 ·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정보와 CCTV 등 안전 정보 제공
  - 거주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과 방학 기간 등 아동 이동 시 해당 지역 돌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전국 정보망 구축

05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을 축소하겠습니다.

현재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줄이며, 시설 개선 필요**
- **부모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체계 개선 필요**

약속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 (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추가 지원
  - 현재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여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만0 ~ 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만0 ~ 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 (만0세 1:2, 만1세 1:4, 만2세 1:6)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획기적 개선
  - 어린이집 만3 ~ 5세 단계적 하향
  - 유치원 만3세 우선 하향, 만4 ~ 5세 단계적 하향
-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아동1인당 보육면적 기준 확대
    ※법률제정 이후 설립 어린이집 우선 적용, 기존 어린이집은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무이자 대출 등) 통해 단계적 개선
  - 공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획기적 모델 추진
-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 긴급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 · 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 · 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06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필요**

약속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 · 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범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 · 청소년 · 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 · 청소년 · 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

▶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

–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 확립

07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고,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현재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현저하고, 사회정서 발달 위기 경계선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발달 지원 전문인력 배치 요구**

▶ **영유아 건강검진과 아기수첩의 분리 운영으로 아동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영유아기 건강검진 기록이 이후 아동기 건강검진과 연계 활용되지 못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아동건강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아동기 특수질환이나 고가의 의약품을 요하는 아동 환자의 의료비로 인한 보호자 부담이 큼**

약속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 영유아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출생이후 고교졸업시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 도입
– 건강검진 기록의 구체화, 체계화 및 여타 건강발달 상황과 연계한 피드백 제공
– 5세 미만 영유아의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청소년

-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위기 청소년 보호

01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청소년은 질병이 의심되거나 질환에 걸린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뿐, 사전 검사를 통한 예방 조치는 미흡**

▶ **연령대별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을 보호하기 위한 검진 필요항목**
- (10대) 생리적 성조숙증, 발달 지연, 생리적 불순, 생리적 통증, 자궁경부암 등
- (20대) 자궁경부암, 갑상선, 질염, 방광염, 자궁근종 등

약속

▶ **청소년기부터 여성 생식건강 증진**
- 청소년주치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대상을 15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적용
- 생식건강 관리군으로 자궁경부암 세포진, HPV(인체유두종 바이러스), 난소건강 등 포함

▶ **여성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 **생애주기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프로그램 구축**
- 영유아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성인 검진과 연계

▶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전담전문의 안심진료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02 위기 청소년을 보호의 울타리로 감싸겠습니다.

현재

▶ **학업 중단 청소년 2015년 4만7070명에서 2020년 5만2261명으로 증가 추세**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차별받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증대

▶ **2020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소년 수는 2,368명**

▶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하여 사실상 가정을 돌보는 '나홀로 돌봄 청소년' 존재**

▶ **위기 청소년은 비행 경험이 높은 것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31.2%에 불과
– 특히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전국 218개소) 경험률은 7.3%

약속

▶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저 찾아나서는 신속,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자동 정보연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 초 · 중만 가능)
–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인력 증원 및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관리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민간청소년 법인 등 활용하여 적극적 지원 및 관리
– 청소년 쉼터 확충
–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 인원 확대

▶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돌봄 지원 안내
– 학업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청년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01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청년 ·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 2030 무주택가구는 178만 가구에 이름**

▶ **반면 정부의 지원은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

▶ **또한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가구는 도심역세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약속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02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 2017년 8·2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

▶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무주택 2030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들은 청약 기회가 원천 봉쇄 (85㎡ 이상만 청약 가능)

▶ 2021년 말에 1인 가구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음

약속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현행(서울 기준)		→	개선(안)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60 ~ 85㎡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85㎡ 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 신설

–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03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장학재단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ICL)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미진학자 및 취업준비생은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

약속

▶ **대출 대상 확대**

–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

▶ **대출 이자지원**

–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0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은 감소**
-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

약속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 ~ 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 (예.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 적립)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선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 지원 방지

05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 **65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579,319명(56%)인데 반해 40세 미만은 12,426명(1.2%)에 불과하는 등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후계인력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
- **농촌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의 경우 농지확보와 자금조달이 어렵고, 지원을 받더라도 중도에 실패해서 정착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음**

약속

-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
- **청년농 직불제 도입 및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 상향**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엄마아빠

-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 확대
- 산모 · 태아 · 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01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출산 후 아동 양육으로 인해 증가하는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 특히, 출산 직후부터 1년간 집중 지원 통해 양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필요**

약속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0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

02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려 부모가 함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육아환경 조성 필요**

약속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육아 재택 근무 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03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만혼, 환경, 스트레스, 불규칙 생활, 불균형 식사(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비만, 술, 담배, 다이어트,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정부는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제한, 연령 차별, 지원횟수 제한 등으로 비용 부담 발생, 난임 치료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난임휴가 기간(3일)은 충분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해 난임치료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

▶ **난임원인의 30～40%는 남성에 있으나 여성만 계속 검사를 받는 등 치료의 비효율성 발생**

약속

▶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로 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04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보육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아동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돌봄·건강검진 서비스가 필요**

약속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의료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부모역량 지원 강화**
– 출생, 아동양육수당 접수, 어린이집·유치원 최초 이용 시 부모에게 양육 교육 및 정보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국가 인증 매뉴얼 적용해 아이돌보미 질적 수준 향상, 아이돌보미 인성 돌봄 등 교육 확대
– 모든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으로 이용대상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K-DST(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검사를 M-CHAT(영유아자폐선별검사) 등으로 대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어르신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및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100세 사회 건강 · 주거 · 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
-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01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2019년 43.8%로 OECD 국가 평균(13.5%)의 3배 이상으로 높음**

–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 자녀교육 등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함

–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 충분한 소득보장기능이 약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오래사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탈빈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구조조정이 시급**

약속

▶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 병행

▶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

▶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02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 대상포진은 만성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 · 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
-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는 2015년 약 66만명에서 2019년 약 74만명으로 급증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03 100세 사회 건강 · 주거 · 문화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돌봄,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민의 복지 수요와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인력 기반 서비스 제공 한계로 복지공급은 양적, 질적으로 미흡
-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돌봄,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공백이 크게 발생하여 본인과 가족들에게 고통 초래

약속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AI와 IoT 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진흥으로 독거노인 등의 안전한 생활 관리, 거동 불편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 보급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현재 국립재활원 등 추진 중인 이승, 이동, 목욕, 식사, 배설 등에 추후 항목 부가 및 고도화
  -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문제해결형 4차산업 복지기술 R&D 확대
-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 공공투자와 민간운영이 결합된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 대폭 확대
    ※대학캠퍼스 연계형, 아파트 신축 재건축형, 시니어 코하우징 (senior co-housing)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 조성
  - 노인 ·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 확대
    ※경제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직접지원, 세제감면, 저리융자 등)
- **문화 ·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여행, 평생교육 참여(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독서 활동, 문화생활(영화관,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체육활동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04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고령가구들은 주택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부족**
–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

▶ **주택을 팔고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동(downsizing)하여 차액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어도 과중한 세금(양도세, 취득세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 부담 때문에 어려운 상황**

약속

▶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IRP) 등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경감**
– 주택 다운사이징 후 개인퇴직연금 등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으로만 수령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추진**
–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
– 일반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상향 조정
(現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장애인

-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 장애인 이동 ·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 장애인의 방송 · 문화 · 체육 이용 환경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발달 지연 ·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01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를 육성하고,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장애인 고용률(35%)은 전체 고용률(60%)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빈곤한 삶 속에 놓여 있음**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정부 정책 속 장애인은 여전히 능동적인 사회구성원보다는 복지 ·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됨

▶ **장애인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력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약속

▶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맞춤훈련센터'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1단계: 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
2단계: 사업체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숙련 과정 진행

▶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 기회 발굴 ·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 도입 등

02 장애인 이동 · 교통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안전한 이동, 이용, 접근은 이웃 · 세상과 소통하고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장애인 · 노인 · 아동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 지표에 비하면 매우 미흡**
- **법령으로 관리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체 시설 중 2.5%에 불과하며, 일상생활 이용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당한 불편 초래**

약속

- **저상버스를 시외 · 고속 · 광역버스로 확대 운행**
-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제한적인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를 100명당 1대로 확대
  -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민간 대형택시로 확대 운용
    *대형택시의 장애인용 택시 편의시설 지원과 장애인 이용자 응대교육 등 인식개선교육 강화
    *중증장애인도 카카오T와 같은 앱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형택시 이용에 따른 차액 지원
-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을 지원하여 연간 안내견 분양을 2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용 실내 · 외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와 보급**

03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확진 시 장애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이 없으며, 코로나19 및 백신접종에 관한 점자 자료, 수어통역 자료, 쉬운 읽기 자료 등이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정보전달 노력 미흡**
- **화재, 지진, 수해 등의 각종 사고 시 장애인 재난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 부재**

약속

- **재난 및 질병 정보를 점자 자료, 수어통역 자료, 쉬운 읽기 자료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화**
- **소방 교육 시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과정 포함토록 법적 의무화**

04 장애인의 방송 · 문화 · 체육 이용 환경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장애인의 안전, 교육, 일자리, 문화 향유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참여율: 장애인 24.2%, 비장애인 60.1%)이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애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체육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일반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 제약으로 체육활동 참여에 어려움 존재

약속

▶ **장애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장애유형별 필요 시설과 독서 보조기기 구비

– IoT, ICT 기술을 적용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원 노력

– 방송화면해설 및 수어화면 비율을 상향해 장애인 방송접근성 강화

▶ **장애인의 문화 예술 지원**

– 국공립 공연장에 장애인 문화 · 예술 할당제 도입

– 박물관이나 고궁 등의 문화재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사회통합형 유니버설 체육환경구축 노력**

–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ICT 및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현실 기반의 장애인 체육 플랫폼 개발

05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상황**

▶ **장애수당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있으나 수당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은 상황**

약속

▶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서비스 칸막이 격파**

–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등 관련 법 · 제도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 개발

▶ **개인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

–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선택 과정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보증**

–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지원 사업 격차 해소**

06 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출산율은 감소하나, 장애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임. 등록된 발달장애 영유아는 0.46%에 불과하지만 통산 2~10%로 추정되며, 국가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주의 또는 정밀검사 필요한 영유아는 지속 증가**

▶ **영유아기 발달지연 및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 제도 부재**

– 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는 전문정보 부족, 국가지원 부족으로 조기 개입의 적기를 놓치고 있어 경제적 · 심리적 고통

약속

▶ **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및 방문 지원제공

▶ **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평가, 재활치료, 교육, 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
– 지역 의료 · 보육 · 교육 · 상담 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으로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지원
–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 원격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코로나19 상황 또는 지역적 제한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기 개입

0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2020년 12월부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장애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성과 자립적 환경조성 기반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장애 예술인 교육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장애유형별 체계적 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 · 예술 향유에 있어 장애인의 문화 · 예술 향유권을 보장할 필요

약속

▶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 강화**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장애학생 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 · 학교 · 협회 · 지역사회 · 재활기관 등에 파견, 전문 강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작품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등 지원
–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 · 도에 배리어프리(무장애, barrier–free) 창작 공간 설치, 저작권 등록, 예술단 지원 등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
– 장애예술 전문 전시공간 건립 확대, 국공립 공연 · 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도입, 저작권 등록 · 보호 지원

*현재 장애예술 전문 전시공간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소수 운영

08 장애인 의료지원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해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활용 필요**

▶ **장애인 전용 치과,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이 치과치료나 건강검진을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약속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AI 모델 확대**
– AI 학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및 확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문재활물리치료사 양성**
– 장애인 주치의 수가 현실화,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의료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 기존 물리치료사 교육 과정에 장애인 물리치료 교육을 추가해 장애인 물리치료사 양성

▶ **장애인을 위한 치과와 건강검진센터 확대**
– 장애인 치과 병원 확대
–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확대,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01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다문화 가구원이 2020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차별없는 학교생활 등이 요구**
- **다문화 청소년 · 청년이 가진 이중언어 능력과 문화 다양성 등 특성을 살려 이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진출을 돕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

약속

- **다문화가족 영 · 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다문화가족 영 · 유아와 아동에게 체계적 이중언어 교육환경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받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 조성
- **양육 ·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 외국 체류 조부모의 입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입국 비자발급 체계 보완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부모 이혼으로 부모 출신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적회복 및 교육 등 지원대책 마련
  -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 이중언어 활용 능력의 강점을 살려 다문화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등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다문화청년들이 부모출신 국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국 지식정보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다문화 학생에 대한 통역사와 변호인 등 진술보조인의 참여를 지원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글로벌 문화융합을 위한 국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 · 초 · 중 · 고등학교에 다문화 이해 및 문화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양성평등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 양육비 이행 조치강화

01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 **OECD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고용률 · 임금 및 관리자비율 등에서 성별 격차가 큼**
– 남녀 평등한 일자리 확보로 공정한 사회 구축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관리직 및 이사회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남성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성격차 지수 및 유리천장지수 등 국제적 성차별지수의 개선이 필요**

약속

▶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근로공시제 참여기업 순차적 확대)
– 성별근로공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으로 기업 부담 완화

▶ **[채용단계]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 공시**

▶ **[근로단계]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 **[퇴직단계] 해고자 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 공시**

02 양육비 이행강화조치 등으로 한부모 가족의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누적 이행률은 2020년도 기준 36.1%에 불과**
– 양육비 이행강화에 따라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출국금지)가 가능해졌으나, 제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성이 없고, 모든 제재조치가 감치재판 이후에 적용 가능

▶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 사각지대 발생**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보유한 재산 또는 비양육자 양육비 지원금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약속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 · 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

▶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
–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 제고**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
–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이름, 직업, 근무지 외 사진까지 포함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의 신상공개를 포함하여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현행 중위소득 60%)과 양육비 복지급여대상(현행 중위소득 52%)을 각각 100%와 80%로 확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마음을 나누는 가족 - 반려동물

•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확대



01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현재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
-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인식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및 실질적인 반려동물 보호 · 복지 대책 마련 필요**

약속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 · 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
  – 반려동물 진료비 · 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 **반려동물 용품 · 미용 · 카페 · 훈련 · 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정비
  –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 · 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지원
-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등 동물복지권 보호
  –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명절과 휴가철 반려동물을 맡길 편의시설 확충
  –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단속 및 처벌 강화
-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개 물림방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 하천구역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시설, 쉼터 확대
-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 **개 식용금지 추진**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 국익우선 외교 | 튼튼한 안보국방 | 일류보훈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

0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여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비핵화 협상 교착**

약속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UN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02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
- **남북관계는 폐쇄와 단절 속에서 대결하는 관계 지속**
- **북한인권문제, 인도적 문제 등 남북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방치**

약속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의 실현**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 **예측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
-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 교류로 전환**
  - 언론출판 교류 · 방송개방 추진,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 청년 · 학생 등 인적 교류 확대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미세먼지 · 자연재난 ·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 · 수자원 협력 등)
-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실시**
  - 재난 긴급구호,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
  -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억류자 송환,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등
- **북한인권개선 추진**
  - 「북한인권법」 충실한 집행
  -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03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부가 군사합의서, 종전선언 등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분열을 야기**
- **통일문제에 대한 여 · 야, 좌 · 우, 세대별 인식이 달라지고 분열하는 양상**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헌법정신이 손상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

약속

- **자유민주 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확대**
  -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통일정책 추진
  -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적극적인 대화 추진
  - 메타버스 가상공간 활용 청소년 참여확대 및 자유민주 통일교육 추진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 · 발전**
  - 선 평화정착 및 점진적 문화 · 경제적 통일, 후 정치적 통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 및 소통 확대
  - 개인의 자유 · 인권 · 복리가 보장되고 더 크고 더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

04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정해진 집행기구로 절차상 먼저 이사회 구성이 필요**
  – 이사 정원 12명 중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절반 추천후 통일부 장관이 임명
-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사 미추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출범이 지연**
  ※국민의힘은 이사회 명단 제출한 상태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을 밝혔으나 실제 노력 전무**

약속

- **여·야가 조속히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재단이 법에 규정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
  –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0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 56%로 빈곤의 악순환 심화**
-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탈북 트라우마 관리 사각지대화**
- **북한태생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률 지식 부재로 사기 등 민·형사 사건 연루 빈번**

약속

-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 취업, 창업, 영농 교육 강화 등 지원 대폭 확대
-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 보완 및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해소
- **법률보호관리 시스템 법제화**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 상 근거 마련으로 관계부처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익우선 외교

-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 · 중관계 구현
- 한 · 일 김대중 –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 한 · 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
-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 실천
- 재외동포청 신설
- 사이버안보 시스템 구축

01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한 · 미 간 신뢰 저하,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에 관해 이견과 소통부재 노정**

▶ **대북 이벤트 위주 접근으로 대북정책 본질이 훼손되고 동맹 간 대북정책 공조 약화**

▶ **북한 눈치 보기로 한 · 미 연합 방위 태세 약화 초래**

약속

▶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 · 미 확장억제를 강화**
-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 및 확장억제 효과 극대화

▶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동맹 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 구축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
- 뉴프론티어 분야(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협력 확대하고 심화

▶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 추구**
- 쿼드(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4개국협의체) 산하 백신 · 기후변화 ·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추구

02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이념편향 외교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약화**
- **미·중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견제 강화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제1의 무역대상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해결 등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인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 유지·발전 필요**

약속

-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 외교 구현**
  -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
  -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고 심화
- **한·중 간 기존 협력기제의 충실한 가동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
  - 한국 국가안보실장 및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외교차관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충실히 이행
- **한·중 고위급 핫라인 설치**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03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 **한·일 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없이 악화일로 지속**
- **한일 관계가 전략적 협력, 지역 및 초국경 이슈 협력 기회를 상실한 채 표류**
-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미래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 업그레이드에 소홀**

약속

-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구축**
  -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김대중-오부치 선언 : 1998년「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구**
  -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 청사진 제시
-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 확대**

04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한·러간 전반적 협력 저하로 관계 발전의 동력 상실**
– 비핵화 노력 없이 남·북·러 철도 연결 등 3각 협력에 집착

▶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미북 협의에 맡기면서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 북핵 및 북한 관련 한·러간 정책·정보 협력 미흡**

약속

▶ **한·러 관계 전반의 활기와 동력을 회복하여 양자간 협력 활성화**
– 양국 간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면서 한반도 미래 협력 제고
– 청년, 인문, 문화교류 확대 촉진

▶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을 통해 호혜적 사업 발굴**

▶ **의료, 관광 등 신규 협력 분야 육성 및 지원**

▶ **북한 문제 관련 한·러간 정보·정책 협력 복구 및 활성화**

05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그동안 대외관계가 주요국과 양자 외교에 치중된 상황 지속**
–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협력 대상 지역의 다변화, 다자·소다자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적 역할이 미흡
– 중국을 대체할 미래시장인 동남아·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지평 확대가 필요

약속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추진하고, 인도·대양주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
– 한·아세안 ABCD 전략* 추진
–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역내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선도하여 동아시아 광역공동체 구축

*ABCD 전략 :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Advance human capital),
보건의료 협력 증진(Build health security),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Connect cultures),
디지털 아시아 구현(Digitize Asian infrastructure)

▶ **유럽국가들과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협력 대폭 확대

▶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자원·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교역·소비시장 확대와 신규 개발 수요 발굴

06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미중 경쟁 및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자국중심주의 심화**
- **공급망, 무역 · 투자, 데이터 안보 구현 필요**
  - [공급망]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전망 구축
  - [무역 · 투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동 지원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데이터] 빅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충 및 신성장 산업 지원 필요**

약속

-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
  - 우리 핵심 제조기술(예: 반도체, 배터리)을 경제안보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
  - 미국과 경제 · 안보 2+2 회의,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경제 · 안보 2+2+2 장관(외교, 경제장관) 회의 추진
-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활용해 전략물자 수급 협의 활성화**
- **쿼드(Quad)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여 한 · 쿼드 네트워크 구축 발판으로 활용**
- **역내 주요 무역협정(인도 ·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
-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 활성화**
  -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 운용

07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하여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기후변화, 환경악화, 감염병, 마약유입, 신흥기술 등 제반 신흥안보 도전과 위협은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 여러 정부조직이나 부처들이 연관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역량이 부족**

약속

-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신흥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 **국무총리 산하에 신흥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 (Emerging Security Commission; ESC)를 설치해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 부여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
  -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신흥안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

08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다자외교 비중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글로벌 외교 리더로서의 역할과 ODA 공여수준(GNI 0.15%)이 크게 미흡

약속

▶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여 개방적 · 포용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년~2025년)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 안정에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구현

▶ **글로벌 기후변화 외교를 강화하여 글로벌 생태계보존과 녹색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

▶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함으로써 국격고양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부응**

▶ **보건안보, 식량안보, 테러리즘,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증진 리더십 구현**

09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약 732만명(2020년 기준)으로 증가하여 전담 정부기구 설치 필요**
–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지위 향상, 재외동포 기업인 · 상공인들의 역량 증대에 따라 본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연계 강화 필요성 증대
–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기대 수준 상승

▶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체계적, 효율적 지원 저해**

▶ **해외출국자가 2011년 1,200만명에 도달한 후, 2019년에는 약 2,800만명(약 133% 증가)을 넘어서면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 · 사고도 약 191% 증가(연평균 15% 상승)**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속으로 ▲귀국지원 ▲방역물품지원 ▲응급의료지원 등 이전과 다른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수요 발생

약속

▶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재외동포청' 설립**

▶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옥타) 네트워크, 해외 유수 동포 기업과 연계,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 **재외동포 권익신장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 분야 · 세대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
– 첨단 미래산업 분야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성 강화 등

10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 **사이버안보는 안보 · 경제 · 정치 · 사회안전(범죄)이 중첩되는 초국경적 사안이므로 관련기관 · 기업 및 외국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
– 한국은 북한의 집중적 사이버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대응체제 완비가 특히 중요

▶ **그럼에도 한국의 현 대응체제는 국정원,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대응이 곤란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약속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민관군 통합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행체계와 활동방식 등을 구체화
– 「사이버안보기본법(제)」「통합방위법(개)」

▶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불법적 사이버 공격에 실질적 방어가 가능한 실전형 인재 양성
– 정부가 전국 지역별 정규과정(대학·대학원) 및 특수과정 (정보보호특성화 대학, 융합보안대학원) 확대와 지역별 정보보호 교육센터 설립 등 적극 지원

▶ **사이버안보 기술 발전 및 기업 지원 위한 사이버안보 생태계 조성**

▶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
–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 랜섬웨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에 적극 참여
–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교육 파견, 사이버 합동훈련 등 국제 사이버 협력을 강화

▶ **사이버 분야 무기체계 및 지원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국방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북핵 · 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01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국방개혁 2.0은 병력과 부대 수 축소에 치중한 반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는 소홀**
- **국방개혁 2.0의 경직된 틀 유지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적기 활용 불가**

약속

- **AI 기반 무인 · 로봇 전투체계 구축**

현재	2030	2040
유인중심 체계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무인 · 로봇 중심 전투체계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 인구절벽 문제 해소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대 재설계 : 부대 · 병력 구조, 교리, 싸우는 방법 등
※국방개혁 2.0에서 4차산업 기반 '국방혁신 4.0'으로 전환

-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 정치권의 군 인사개입 차단, 군 지휘체계 확립
  -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 : 메타버스(AR · VR · XR) 활용 등
- **현역병 소요 단계적 축소(징모혼합제로 전환)**
  - 무인 ·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 감축
  - 비전투분야 민간인력(군무원,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으로 대체
-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원격교육 통한 예비군 소집훈련 축소, 평시복무 예비군 운영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 최저임금 시급 적용
- **첨단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방산체계 구축**
  -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 · 경직성 · 폐쇄성 개선
  - 국방벤처 육성(산 · 학 · 연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지원 확대
  - 국가 전략 차원의 방산 수출 확대,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02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기동훈련 취소 등으로 한미간 신뢰 저하 되고,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이 증대 되어 국가안보에 취약점 발생**

약속

▶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 한미 외교 ·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

▶ **무너진 신뢰 회복,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사드기지 정상화(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임무수행 여건 보장)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미 군사과학기술센터 설립을 통한 R&D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복원, 핵 · 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고위력 · 초정밀 · 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및 SM-3 적기전력화 등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레이저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 개발
-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 및 한미동맹 전략자산으로 응징
  *압도적인 응징능력 구현을 통해 북한 도발 억제

▶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30년→ '26년)**
-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 최단시간 내 배치, 돔 형태의 방어망 구축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통합, 다층 방어망 보강

▶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 군 정찰위성 조기 운용 및 추가 확대, 핵심표적 상시 감시능력 확보
- 북핵 ·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 대응을 위한 적시적 정보지원

03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미래 세대의 요구 등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병영생활 환경**

약속

▶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 의 : 군 보급품 전면 재검토, 품질·기능 강화, 계약체계 개선
- 식 : MZ세대 전투식량(1회용 고품질 건강식) 개발,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친환경 농산물, 지역과 상생하는 군 급식 조달체계 정상화
- 주 : 2~4인 거주,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군의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
- 필요할 때 언제든 치료·상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최고 브랜드의 군 전문병원 육성 :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
- 국가책임 '軍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획기적 보상 확대

▶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창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혁명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업·취업·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 강화
-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대학 확대 추진(159개 → 모든 대학)
- 임무수행에 필요한 근육개발 센터(Muscle Center), 트레이너 지원
-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및 주말 외출 확대

▶ **병 휴가산정 방법 개선(토·일·공휴일 휴가일수 포함 → 미포함)**

▶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 본인이 원하는 입대시기 최대 보장**

04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 **군사보호구역 설정과 훈련 소음 등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 침해**

▶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약속

▶ **산재한 군사시설,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폐합 → 민군복합타운 조성**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필수지역 제외하고 전면 해제**
- 관광단지·산업단지·문화예술주거단지 등으로 개발

▶ **지역주민 개발이익 수혜, 사유재산권 보장, 민·군 관계 개선 (갈등 → 상생)**

▶ **장병 주거·복지시설 개선, 훈련·임무수행 여건 보장**
*전방부대 1-2개 지역 시범 시행 후 점진적 확대

05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약속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급적용)
-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6개월 → 18개월, 소급적용)
-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24개 → 모든 대학)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 **직업군인의 처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 군인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 보상체계 전면 개선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장기복무수당 등 각종 수당
- 군 주거지원 정책 강화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
- 군인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 단기복무장교(학군 · 학사 · 전문사관) 복무기간 단축

▶ **국군포로 송환노력 및 대우 개선, 보훈 관련 지원부서 통합**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일류보훈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
- 보훈 사각지대 해소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
-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추진

0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여 예우 및 지원을 최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 **현행 보훈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9개 분야별로 각 개별법령에 근거해 그 대상선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보훈대상은 법률체계나 연혁,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음

– 특히 개별 보훈대상 근거법령 개정 시 타 보훈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보상의 종류와 정도에 불만이 쌓이는 상황

약속

▶ **보훈대상별 보훈체계 재설계, 공정보훈 체계 구축**

–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 보훈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체계화

– 상이등급 기준 개선

–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 대폭 개선**

– 참전명예수당(現35만원) 2배 인상

– 무공영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6.25 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등

▶ **보훈국가입증제 도입**

– 직무관련성 인정 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화 등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2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현재

▶ **전공상을 인정받고도 상이등급 미달 등으로 보훈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는 국가유공자 선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 **현재 PTSD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는 실정**
– 입증자료 부족, 엄격한 심사기준, 개인간의 차이 등
– PTSD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치료시설 구축 필요

약속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심사 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
–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 · 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
–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 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

▶ **보훈심사 기간 단축**
– 6개월 이내 (2021년 평균 245일)

03 전국적으로 보훈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현재

▶ **국가보훈처는 2021년 기준, 6개의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458개의 위탁병원 운영 중. 2022년까지 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 예정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초고령화(6.25 89세, 월남전 74세)에 따라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나 질, 의료비 부담 문제 지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약속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 ·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현재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

04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그동안 중장기 복무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의무복무 장병은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

– 매년 전역하는 25만명 청년의무 장병에 대한 지원*이 관련 시간과 기회의 손실(학업 · 경력 단절, 취업기회 상실)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

*현재 취업응시연령 연장, 군 경력 호봉 인정, 복학 · 복직 보장, 복무 중 학점 인정 등

▶ **중장기 복무장병(매년 7천여 명 전역) 취업률 또한 낮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평균 61.3% 수준으로 미흡

▶ **소극적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개선 필요**

– 의무복무자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현재 5년 이상 군 복무자 대상)

약속

▶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청년 의무복무 장병 (가칭) 사회복귀 '빌드업 보훈 바우처 제도' 도입

*교육, 직업훈련비 등

▶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실업급여 수준 등 고려)**

▶ **제대군인 지원센터(現10개소) 확충 및 역량 강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희망사다리교육 | 과학기술 선도국가 | 문화예술체육강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사다리교육

- 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01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 3년 차로 교육환경 급변**

▶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와 학습의욕 저하 문제 직면**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급격히 증가

▶ **위드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

약속

▶ **교육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초등학교 코딩교육, 초 · 중등 교육과정의 AI교육 필수화
– 대학 기초과목에 AI 튜터링 전면 도입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과 AI 보조교사(튜터)로 학습격차 완화 및 기본학력 향상**
–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 · 평가하여 빅데이터 구축 및 맞춤형 학습 지원
–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및 전반적 학력 제고 실현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AI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시험에도 반영**
–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분석, AI 소프트웨어 활용 등

▶ **자기주도적으로 AI전문가가 되는 메타버스 전문교육과정 지원**

02 선생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아이들 학습권을 지키겠습니다.

현재

▶ **단위학교 업무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보직교사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신학기만 되면 담임 · 보직교사 기피 현상 심화**
– 행정업무 내몰려 교육활동 저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육주간 설문 결과,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 3년 연속 1위 차지**
–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름길

약속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및 시스템 개선
–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 완화

▶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03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통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하락**
– 2017년 50.6%에서 2020년 27.7%로 감소
– 대학 진학률은 2017년 32.5%에서 2020년 42.5%로 증가

▶ **전문대의 취업률은 70.9%(2019년 12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63.3% 보다 높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하락 예상**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의 학생 모집도 위기 심화

약속

▶ **산업 연계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취업역량 제고**
– 학교중심에서 산업계 주도형 도제교육으로 전환
– 학교와 회사를 오가면서 배우는 '코업제' 도입

▶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신산업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
– 특성화고 · 전문대학 6년을 5년으로 단축한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 **고숙련 인재로 성장을 위해 국가가 경력관리를 지원**

▶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
– 신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교육 수요 반영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 직업교육 실시

04 대학의 패스트 러닝 트랙으로 신산업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에 역부족**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대상 63개국 중 교육 경쟁력 27위, 대학 경쟁력 48위(2020년 기준)

▶ **코로나19와 대변혁의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적, 탄력적 학위 과정 운영 필요**

약속

▶ **자율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획일적인 대학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

▶ **대학 학위과정 편성 및 운영의 완전 자율화**
– 신산업 관련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패스트 러닝 트랙(Fast Learning Track)으로 신산업 첨단인재의 조기 양성**
– 학·석사 연계 과정, 학·석·박사 연계과정, 석·박사 연계과정 등

▶ **미래 유망산업 10개 학문 분야 10년간 집중 육성**

05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습니다.

현재

▶ **대학이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산출의 주역으로 등장**
– 선진국에는 기술이전·창업을 통해 수익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형 대학 다수

▶ **현재 대학창업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절되어 있고 고급 연구 인력은 창업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창업을 기피**

약속

▶ **대학이 경쟁우위에 있는 인력과 기술을 활용, 스타트업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 창업기지로 활용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대별 맞춤형 창업·창직 지원**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대학창업 컨트롤 타워 설치**
– 소관부처 단일화, 보상체계 등 제도·법령 정비하여 스타트업 창업 열기 진흥

06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은 수월성 바탕의 창의 · 도전적 인재가 주도**
– 과학기술 인력 부족, 산업 기술추격형 인력 위주

▶ **디지털 기술분야 미래세대 육성, 인생 다모작 위한 중장년층의 전환 기회 마련**
– 산업계는 맞춤형 인력부족, 대학은 학부제 중심 공급 과잉 미스매칭 발생

약속

▶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시대 산업수요 맞춤형 청년 · 여성 혁신인재 육성**
– IT DNA(Data, Network, AI), 바이오테크놀로지(BT) RNA,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미래 인적자원 선제적 확보
– 대학 · 기업 등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 설계
– 청년 · 여성 과학인을 위한 연구 기회 · 평가의 공정성 ·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 청년 · 여성 과학인들이 과학기술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 청년 · 여성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의 국제연수 · 국책연구사업 참여기회 부여해 경력주기별 맞춤 지원

▶ **산업대전환을 계기로 인생다모작을 꿈꾸는 중장년층 새로운 기회 제공**
– 소상공 ·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4차 산업혁명 전환교육 기회 확대
– 전국 폴리텍대학 및 지역대학을 권역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으로 지정·운영

▶ **생애주기별 · 직군별 교육프로그램 확충**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의무화
– 대학별 연 100~300명의 결손인원을 활용한 AI관련학과 신 · 증설
– 모든 군 장병 대상 AI 기초소양 교육 실시
–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지원제도 마련

▶ **AI 및 소프트웨어 교원역량강화 정책 시행으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07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급격한 기술 · 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 확대**
–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35만원을 지원
– 키오스크, 무인점포 확대 등 세대별 디지털 친화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절실

약속

▶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별 · 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적 단절 · 소외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직무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제 도입**

▶ **교육 약자와의 동행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대학학위과정을 통한 공정한 대학진학 기회 제공
–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로 꿈 실현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조기 은퇴자 및 정년 퇴직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공

08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스템이 구직 · 재직단계에 집중**
– 중 ·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과 연계 부족

▶ **단절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생애 직업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 학교단계(커리어넷), 구직단계(워크넷), 재직단계(HRD–net)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연계 부족

▶ **재직자 · 사업주훈련의 질적 내실화 미흡**
– 일터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의 역량개발과 생산성, 효율성 증대 부진

약속

▶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재학 – 구직 – 재직 – 이 · 전직 – 퇴직 – 노후 등 전국민 생애단계별 교육훈련 ·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존의 단절적이고 파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재구조화
– 생애 전(全) 단계별로 필요한 소득보장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생애경력관리스마트플랫폼(Career Care Smart Platform) 구축 운영

▶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 일터에서의 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교재 개발, 교 · 강사, 인력순환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촉진

09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 · 안정적 역량개발 애로**
–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근로자의 잦은 이 · 전직으로 인력 활용 애로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수혜 저조**
– 사업주는 훈련 중 대체인력 확보 곤란, 훈련비 부담, 훈련 후 인력 유출 우려 등으로 근로자훈련에 소극적
– 근로자는 시간 부족, 적합한 훈련정보 및 상담 부족 등으로 훈련 참여 저조

약속

▶ **중소기업 직업훈련 특화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의 인력 및 숙련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소기업 대상 기업직업훈련바우처 확대 및 대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 협력에 대한 우대 지원

▶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제도 도입**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정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역량진단, 정보제공, 경력설계 등을 상시 제공하고, 향후 전체 기업으로 확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국가

- 초격차 · 초연결 ·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
-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 주력산업 발굴 · 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
- 국가 R&D 설계 개편
-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01 초격차 · 초연결 ·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현재

- **초격차 혁신기술 바탕의 국가전략산업분야 육성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없이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
- **미래 핵심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초연결 · 지능화 인프라 구축**

약속

-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 집중 투자 및 민간 투자 적극 유도**
  - 국가 난제(감염병 · 미세먼지 · 저출산 · 탄소중립 · 고령화 등)와 디지털(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
  - 관련 분야 민간 투자 적극 유도
-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 연구개발과 시장진입 관련 2022년말까지 규제일몰, 신규 비즈니스는 규제샌드박스
  - 산 · 학 · 연이 공유하는 개방형 기술 스케일업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 블록체인 융합 5G · 6G 지능형 초연결망(DX-Superway) 등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
  - 5G의 원활한 전국 개통을 추진하고, 5G보다 100배 빠른 6G 기술 선점
  -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구축
  -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 한국형 GPS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 **5대 메가테크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돌입**
  -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 원전 등), 양자(Quantum), AI 반도체 · 로봇 등 5대 메가테크 미션지향적 초격차R&D 추진

02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현재

▶ **디지털 지구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재편 필요성**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전세계 디지털 각축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전략 부재**

▶ **국가 전략 부재에 더해, 여전히 대한민국은 산업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상황**

▶ **다음 세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디지털화 · 지능화로의 변화 요구 대두**

약속

▶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산업 목표**
- 대학, 연구소, 기업 공동 활용 가능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
-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 강화

▶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도약**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공공 IT 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
- 정부 발주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 대폭 확대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초 · 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및 대학에 AI · 소프트웨어 · 데이터 · 반도체 등 디지털 학과 확대 및 국가 장학금 대폭 확충
- 디지털 영재학교에서 나이 · 학력 무관, 전액 국비로 디지털 영재 육성
-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인재 채용 인센티브 확대, IT 산업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원

▶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가능한 5G MEC 기술 적극 육성
-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5G 서비스 제공
-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 클라우딩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제도 도입

▶ **AI 반도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등 기술혁신 유도**
-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는 물론 AI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 추월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설비투자 적극 유도 (세제 정비 및 전력 인프라 지원 등)
-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 드론 · 도심항공교통 (UAM :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 **메타버스 선도국가**
-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화 추진
- 메타버스 생태계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글로벌 메타버스로의 확장성을 위한 디지털화

▶ **사이버 안전망 강화**
- AI 활용 토탈 사이버 대응 체계
-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으로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
-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03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 먹거리산업이 됩니다.

현재

▶ **기존 3차 산업시대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먹거리 창출 긴요**

▶ **디지털 대항해 시대, 주력산업 발굴 · 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선도 필요**

약속

▶ **(IT) 초격차 리얼 디지털인프라 산업 육성**
- 현실과 가상공간 공존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과 사업을 세계 일류화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 지능형 반도체, 고화질 디스플레이, 초지능형 모바일, 초고속 5G · 6G 이동통신 등

▶ **(BT) 유전자통합제어 기술 및 산업**
-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인 유전자편집기술 등 유전자통합제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
- 유전자 통합제어로 희귀질환치료 등 국민 의료건강 향상에 획기적 해결방안 마련
-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

▶ **(MT)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 데이터, 모바일, 초고속이동통신으로 제어되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을 세계 일류화해 기존 주력산업의 4차 산업혁명화 지원 및 고용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비롯 다양한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신산업으로 전환 · 발전지원 · 규제폐지
- 교통약자 · 교통소외지역 이용자를 위한 교통복지기술개발 확대

04 기초과학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전략 부재**
- 투자 목표치 산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 설정

약속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관련 제도 혁신**
- 현 5조원 수준에서 대폭 확대
- 「(가칭)기초연구투자촉진에관한특별법」으로 기초연구투자의 제도화 준비,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은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으로 대체하고, 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을 국가생존기술 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 NST에 과학기술통합정보망과 연동하는 '국가전략기술연구 플랫폼'을 구축
-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및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확립

▶ **창의 · 도전 연구 강화**
-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노력
- 5+5년 '자율기초연구사업' 시행

▶ **과학기술인 연금 및 정년 제도개선**
- PBS 제도개선 등 검토

05 국가 R&D 설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 **국가 R&D 100조원 시대의 개막과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 부재**

– 우리보다 앞서 100조원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19년도기준) 1위 미국 (민간재원 495조원, 공공재원 228조원), 2위 중국(290조원), 3위 일본(민간재원 154조원, 공공재원 40조원), 4위 독일(민간재원 94조원, 공공재원 41조원)

▶ **국가 R&D에서 민간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최근 민간 투자 활력은 점차 약화**

*민간재원 증가율(%):
('17년) 14.7% → ('18년) 9.4% → ('19년) 4.3% → ('20년) 4.0%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
('17년) 16.0% → ('18년) 10.0% → ('19년) 3.9% → ('20년) 2.9%

약속

▶ **국가 R&D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 위한 R&D 정책 설계 개편**

– 국가 R&D 결정시 국가 임무형 기술 R&D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세분화해 중장기 전략과 재정계획 수립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등 도입해 10년 이상 국가적 장기 연구사업의 계속 추진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 민간 주도의 R&D 환경으로 체질개선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

▶ **국가임무해결형 혁신체제를 설계하여 국가임무해결에 집중 투입**

– 정부 R&D의 설계 구조시 국가임무해결,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AI연산용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신기술벤처 육성 등 전략적 고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임무 달성의 중심
– 산·학·연의 연구역량이 개방형으로 결집·연결되는 리빙랩 방식의 「국가임무해결혁신센터」를 각 국가 임무 과제별로 설치

▶ **연구도전 시스템 설계 확대·발전**

– 창의·도전적 연구의 지원을 위한 연구도전 기회 대폭 확대 및 R&D 설계 변경
– 창의·도전적 연구도 장기과제에 적합 여부 판단해 지속 예산 지원

▶ **과감한 조세·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2배 증가 유도**

–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기술혁신R&D지원제도의 확대시행과 출연지원의 민간매칭 확대
– R&D와 신기술제품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민간혁신활동 유인
–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조정
–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방향 설정 및 심의 확정

06 메타버스,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현재

▶ **세계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 경쟁에 뒤처지는 대한민국**
–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 만연
– 하드파워(통신 인프라) 대비 소프트파워(콘텐츠) 경쟁력 열위
– 메타버스 산업 관련 인력 부족

약속

▶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 가상–현실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로 국민 편의성 증대

–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O 거래소 개설 후)

–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강화

*NFT :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ICO :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 인력 양성**
–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 배정

▶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소외 방지책 마련
– ICO 허용 및 해외 거래 가능한 상품은 국내에서도 출시와 거래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 확대

▶ **디지털 격차가 없도록 학교 및 국민체험시설 확충**
– 체험형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및 노년층의 IT 접근과 10~20대의 메타버스 체험 등

07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우주시대가 열립니다.

현재

▶ **국가 안보 및 미래 핵심 경쟁력을 위해 세계는 우주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 3,710억 달러(약 423조원)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약 1,286조원)로 확대 예상

– 미국(NASA), 일본(JAXA), 중국(CNSA), 유럽(ESA), 러시아(RFSA) 등 전담 조직화

약속

▶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추진기구 정비로 2035년 우주강국 진입**

–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 설립

– 우주항공 통합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마련

– 우리 위성 자력발사와 달 · 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추진

▶ **우주산업 발전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항공기술, 우주비행기 제조, 위성탑재체, 통신위성 개발 지원

– 데이터획득,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 솔루션 기술 혁신 추진

–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극초음속 항공 기술, 초고속 항공기 개발

– 지역 · 거점 대학별 우주항공 특화교육으로 10만 뉴스페이스(New Space) 전문가 양성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조기 구축**

– 한국형 GPS 위성 조기 시험 발사 추진

–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 완성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강국

-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구축
-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
-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 K-컬처 콘텐츠기업 지원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국민 스포츠권 보장
-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 체육재정 확대
- 전국 차박 명소 1만 여개 발굴 및 개방

01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 **국민의 보편적, 맞춤형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필요**
-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문화예술 시스템 전환 미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문화시설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생태계 구축 시급**

약속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신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수혜금액 상향 조정
- **전 국민 대상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시장 확대**
  - 언제 어디서든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 실현
  - 디지털 소외가 우려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체계 및 예술 – 기술 융합 체계 확대**
  - 창의성 제고, 융합교육 중심으로 문화교육이 추진되도록 교육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재교육, 새로운 전문인력 충원
  - 문화시설을 ICT 공간으로 조성
  - 예술 –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적용 확대**

0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벼랑 끝 생존위기**
- **예술인은 진입장벽이 높고, 예술인간 양극화가 심하며, 불공정 환경 심화**
- **복지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 미흡**

약속

-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 확보, 재원의 독립을 통한 예술지원의 자율성 제고**
-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 예술인, 창작자, 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체계 개편
- **저소득 예술인, 청년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체불·생활고 예술인 긴급구호 지원 강화 등 예술인 안전망 확대**
  –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 **예술의 창작 지속가능성 감안 다년간 지원 위주 전환**
- **과학기술·예술 융합 문화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전국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창작·스타트업 공간 제공 등
- **예술인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등 관련 행정 개선**

03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효율적 관리와 투자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류 콘텐츠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국외로 유출된다는 비판이 있음**

약속

- **콘텐츠 기업 및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 마케팅 및 디지털 유통 역량이 미흡한 프리랜서 및 중소 콘텐츠 업체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
- **한국문화를 글로벌 문화의 미래로 발전**
  –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한국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식, 패션 등 K-생활문화로 확산 지원
  –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한국, 한국문화, 한국의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04 K-컬처 콘텐츠기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현재

-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훨씬 용이**
-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크게 높아질 전망**
- **수많은 소규모 문화기업들이 글로벌 진출로 스타기업으로 활약하기 위해 혁신활동을 촘촘하게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절실**

약속

- **'세계 공감 국민창작 공모시스템' 구축**
  -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 **대기업과 창작력을 갖춘 수많은 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민간 콘텐츠 업체의 IP 및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NFT :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업 – 대학 – 정부 ·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방송 및 영상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광고, AI, NFT, 메타버스와 연계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등
- **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 아이디어 기획, 제작 및 저작권 등록,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 콘텐츠 사업자 중심 국내 문화콘텐츠 해외 현지 제작 지원 확대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
  - 저작권 보호의 글로벌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한 한류 문화 · 콘텐츠산업 보호
  - 국제 저작권 기구 연대 외교적 촉구 등 동시 대응

05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여전히 문화재로 인한 갈등 발생**
- **문화재 보존 및 개발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 구조적인 문제 발생**
  - 문화재지표조사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비용부담이 훨씬 큰 발굴조사는 소규모만 국가 부담, 개발업체로부터의 공정성 확보 한계
- **유형문화재 관리 취약, 무형문화재 전승 단절 등 문화재 보존관리 위기 심화**

약속

-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제도 개선**
  -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예측가능한 문화재 경관관리 및 갈등 최소화
  - 구역별 · 유형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전환
  - 중점보호주의에서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의 포괄 보존체계 전환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부담
- **지역 관련 문화재 보존 연구기관 기능 강화, 전문인력의 재교육**
  - 공공문화재 발굴기관 확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재산상 손실 주민 지원확대
  - 경주 등 문화재 연구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연구기관 역량 강화
-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재단의 기능 강화**
  -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특별 지원 확대
  - 유통 및 발표 기회 확대, 원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의 제작 및 유통 확대
-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 강화**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지원 및 문화유산의 전승 · 가치 제고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세제 개선
  - 문화유산의 포괄적 관리체계 전환 및 전담조직 신설
  - 국공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
  - 전통문화유산(팔만대장경 등)디지털화 구축 지원

06 게임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 여파로 게임산업 규모가 21.3% 성장했으나,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게이머 권익 보호는 여전히 미흡함**
*2020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1.3% 성장(약 19조원) (202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은 높지만, 세대 · 지역 · 종목 편중화로 산업 전반경쟁력이 낮고 성장의 한계가 노출됨**

약속

▶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는 공정 감시 시스템 도입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등)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e스포츠 지역 연고제로 '지역 거점 e스포츠클럽' 활성화**
– 특성화고/스포츠대학 등에 e스포츠 전공을 확대해 아마추어 리그를 활성화하고 프로 리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e스포츠 생태계 구축
– e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신설, e스포츠 아카데미 세제지원 제도 등으로 e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
– 지역 연고 유소년 시스템 등을 통해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육진흥투표권에 e스포츠를 추가해 e스포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의 확장을 위한 재투자 유도
– e스포츠 상무팀 창단 지원
– 유아 청소년 대상 e스포츠 체계적 교육 추진

▶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07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국민 스포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국가에 대한 기대 상승**

▶ **운동하는 국민, 개인의 이익 넘어 의료비 절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

약속

▶ **국민 스포츠인센티브, 운동하는 국민께 인센티브 제공**
– 운동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 건강보험료 환급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유·청소년 및 노인 체육활동 지원**
–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
– 초등 체육교육 지원 강화
–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지원**
– 파크골프장 확충, 낚시 규제완화 및 활동지원
– 둘레길 등 트레킹 문화 활성화

▶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 취약계층 대상 체육서비스 제공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하여 스포츠 격차 해소

08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학령인구 감소 및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 미흡 등으로 전문체육 위기에 따른 체육시스템의 혁신 구축 필요**
- **은퇴선수 무직비율 35% 등 체육계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제도권 내 체육계 양질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추진 필요**

약속

- **전문체육 멀티소스 양성 시스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전문스포츠클럽 투–트랙 선수양성 지원 및 개방형 대회 시스템 확대
-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
  – 실업팀 소속 지도자·선수 고용안정 및 체육인 역량강화
-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
- **체육재정 확대 및 체육계 지원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체육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체육분야 사업 예산 확대
-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문제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체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로 꿈을 이루는 스포츠 현장 중심의 제도 구축

09 전국 차박 명소를 1만 여개 발굴하여 개방하겠습니다.

현재

- **국내 캠핑 인구는 약 700만명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19로 타인과 분리된 자연에서 힐링을 즐기려는 언택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높아진 수요에 비해 장소는 턱없이 부족**
- **국립·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림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 등에서의 차박은 불법이므로 실질 차박이 가능한 곳은 많지 않음**
- **인기 지역들은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 차량 통제 구역 증가**

약속

- **풍경명소 유휴부지 등 노지 차박 가능지역 발굴, 자연을 그대로 두고 최소한의 인프라만 구축**
  – 텐트 및 추가 야영시설 설치, 야외취사 등 캠핑은 금지하고 차박 전용 시설로 운영하여 오염 원인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시설을 무인 유료화하여 유지비용 충당
- **차박 포인트, 민간사업자 지도 앱 등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기존 오토캠핑장 외 별도로 차박 포인트 안내 추가
-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가족캠핑장 1천 곳, 자연휴양림 시설 추가 확충**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 | 기후환경위기 대응 | 원자력발전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 확대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01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으로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중간목표로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UN에 제출 (2021년 11월,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
-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EU, 미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
- 폭염, 한파, 돌발 홍수 등 이상 기후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피해 증가

약속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
-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ESG기업 참여 유도
- 홍수 · 도시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를 과학화 · 체계화하고 제방 · 배수시설 등 인프라 전면 보강
- 기후위기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식탁물가 안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급망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을 안정화
- 기상이변 시에도 전기 · 용수 · 교통 · 가스 등 주요 시설물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설계기준 변경

02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 연대와 노력이 확대되며, 유럽 등 중심으로 탄소저감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저감 대책을 마련해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범국가적 지원 강화가 요구됨**

약속

▶ **산업계 · 학계 ·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입법 예산 인력 분야의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 지원
- 저탄소 사업 구조로 전환 지원 강화 및 근로자 지원시스템 마련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 수립

▶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투자 포함
- 신성장 · 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관련 기술 조정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기후환경위기 대응

-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사전예방적 관리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 제공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가능 발전 도모
-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

01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하겠습니다.

현재

▶ **초미세먼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
- 최근 약간 개선징후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의 2 ~ 3배 수준
- 동절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중되어 급격히 악화되는 빈도 증가

▶ **현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으나 실효적 대응은 미흡**
-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보건학적 피해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약속

▶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
- 자발적협약(VA)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을 50% 이상 축소
- 고농도 발생시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조정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 **초중고와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50㎍/㎥에서 40㎍/㎥으로 대폭 강화**
- 초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에서 2일전 발령으로 변경하여 사전예보 실효성 향상**

02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적극 육성하고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2030 국가온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 강화 필요**

약속

▶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우수 수종 도입 및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 임도(林道) 확충과 경제림 조성을 통한 목재 생산과 일자리 창출
-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위한 임업농가 지원 강화**
- 임업직불금 제도 강화
-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숲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쾌적한 도시 정주를 위한 도시 숲 조성 확대

▶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산불 · 산사태 · 산림병해충에 의한 인적 · 물적 피해 최소화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재난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와 피해 조기복구

03 사전예방적 관리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수돗물 적수, 유충 발생 등으로 국민의 물 이용 불편 등 물 서비스의 불신이 커짐**
- 기존에는 공급시설 건설 위주의 물관리로 관 파손, 시설물 관리에는 소홀
- 사고 이후 대응하는 사후대응적 관행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증가함

▶ **2030년에는 70%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상수도,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성능 저하와 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 증가 예상**

약속

▶ **사전예방적 물시설물 관리체계 구축과 선제적 투자로 걱정없는 물서비스 제공**
- 물인프라의 성능점검, 위험도 평가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능력 제고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물시설물의 현대화, 지하화, 재구축을 선제적으로 실행

▶ **서비스 중심의 물사업체계의 전환으로 국민들이 만족하는 물서비스를 제공**
- Io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운영관리 등 기반시설 관리체계 대전환

▶ **물산업을 광역화 · 규모화하고 지역별 물서비스 요금의 불균형 해소**
- 시설물관리와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의 공동관리 등을 통한 규모화, 광역화를 통한 물서비스 경쟁력 확보

04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현재

- **기후변화로 서식환경이 바뀌고 도시화로 자연서식처가 감소하는 상황이나, 코로나19 이후 인접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와 탄소흡수능력 확충 필요성이 증가**
- **가시박 등 농업용으로 해외에서 유입한 식물을 방치하여 고유 생물 다양성을 크게 훼손**
- **서식지 보호로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열섬현상,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도 녹색공간 지속적 확충 · 보존할 필요**

약속

- **자연 보전을 위해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화된 기후에 적합하게 과학적인 보전 · 복원
  - 고유생물종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약품 · 화장품 등) 육성
  - 가시박 등 외래종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제거작업 실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탄소흡수를 늘리고 목재생산,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에 활용
- **도시 · 옥상 · 하천 · 습지 · 유휴지 등 가용지에 식재하여 녹색복원을 확대**
- **식생관련 공간정보를 일원화 · 체계화하여 토지이용변화, 식생변화,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고, 녹색공간 보전 및 확충관련 사업을 체계화하여 추진**

05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 **폐기물 분리수거를 세분화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불편**
  - 분리배출을 해도 혼합수거한 후 선별시설에서 재분류하여 비경제적
- **EU에서는 페플라스틱은 일정비율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출품에는 재생원료를 혼합 사용할 필요**

약속

- **플라스틱, 1회용품 및 포장재 쓰레기의 발생 줄이기**
  - 제품제조단계에서 단일재질화 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고, 1회용품 사용과 발생자체를 저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 신축 건물과 단지는 분쇄기(디스포저) 사용**
  - 파쇄한 후 하수구에 배출하면, 건물하부에 설치한 수거용기에서 회수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 **쓰레기 처리를 현행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
  - 재활용되지 않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것을 열분해하여 친환경성을 보강
- **재활용품 회수시스템 전면 개편**
  -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춰 쓰레기 처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적용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원자력발전

-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 한미원자력동맹 강화, 원전수출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적극 개발

01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지속 이용이 필요**

–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급망 및 산업 기반, 가동 원전의 안전 및 수출경쟁력에 위협 상황 전면 극복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비경제성,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며 원자력과 조화로운 운용이 요구

약속

▶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

▶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 NDC 목표 분석, 정부에 분산된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통합 관리

– 에너지원별 조화와 합리적 비용 추계가 반영된 적정한 에너지 믹스 수립

02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 **2017.10.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고, 탈법적 절차로 탈원전 선언, 이후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며 부작용 속출**
  - 혈세낭비, 원전 공급망 및 원전 생태계 훼손, 수출경쟁력 추락, 에너지 정책 혼란, 발전공기업 적자 누적, 과학기술 퇴보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결여 인사로 구성, 정치적 이념적 결정에 치중
- **기후위기 심화로 간헐적 환경파괴의 우려가 큰 태양광, 풍력이 아닌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탈원전 폐기와 함께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전 안전이용 기반 강화 필요**

약속

- **과학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자력 정책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실효적 안전규제 확보, 안전성 담보해 원전 계속 운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한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기반 확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꾸준한 이행**

03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용은 경쟁국에 비해 30% 이상 저렴, 2009년 UAE에 APR1400 수출 이후 원전 수출 전무,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등 경쟁력 향상 위한 기술개발 중단 상태**
-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1980년대 구축된 산업체계를 유지, 수출체계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상황**
  - 사업개발전략상 차이, 산하기관(한전기술 등)은 동일, 지휘체계는 이중적이고 중복되어 비효율
- **한국의 탈원전, 상호신뢰 붕괴 등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도 지지부진**

약속

-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 원전 산업체계 개편방안 마련,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 수립
  -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정 및 수주지원
- **한·미간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 미국의 외교력 및 원천기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 사이에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 달성하여 10만개 고급 일자리 창출**

04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 탄소중립 에너지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와 미래혁신 원자로 연구개발 환경 붕괴
- 전 세계적으로는 안전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급속 진행 중, 우리나라는 2012년 SMART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한 SMR 선도국 지위를 탈원전 정책으로 상실
- 무탄소화에 필수적인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진행 중이나 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에서 원자력 수소를 배제

약속

- **수냉각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SMR 시장 선점**
  –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수출 산업화 강화
- **수소병합 원전 개발 및 수출 상품화**
-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 SMR 개발**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국민안전 | 안심먹거리 | 범죄예방 · 피해구제 | 국민건강지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안전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신속 ·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에 예방
- 해양영토 주권 수호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01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통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약속

▶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 및 예산 집중 지원
-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컨설팅기관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강화**

*(예) 택배노동자 등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방식 마련

02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재난 관련 신고 및 대국민 재난 정보 제공이 다양한 경로와 채널로 이루어져, 대응 체계의 중복과 혼선이 야기**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및 재난관리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인력 확보 및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원인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일시적이기에 한계와 제약이 존재**

약속

▶ **AI ·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 재난안전 관련 신고 및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정립
- 분산된 재난안전 데이터를 연계 · 통합 · 확산, 증거기반 예방정책 수립
- 인력, 재정, 시설, 장비 및 물품, 조직 등 정부 – 지자체 – 민간 차원의 재난관리 자원 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
- 재난 예측, 대비, 대응, 복구, 완화 또는 개선 등 재난관리 단계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의 제도화 및 기술적 구현

▶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 · 민간 협력 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확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형 재난관리 지원제도를 개발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영역 포괄하는 지능형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가 위기관리 센터를 국가안보와 위기관리(재난안전)로 구분, 자연재난 위기관리와 사회재난 위기관리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
- 지자체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재난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실질적이고 신속한 손실 · 피해 보상 체계 구축**
- 한국형 재난원인조사 방법과 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원인조사 전문인력을 통한 진상규명–피해지원–제도개선 등 체계성 강화
- 재난 피해자의 수요 맞춤형 구호물품 배분 솔루션 개발 및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간략화하고, 재난보험 지출, 구호지원 및 대출신청, 세금감면 등과 같은 지원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손실 · 피해 보상 원스톱 서비스' 구축

03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광주광역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및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등 연이은 건설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
- **건설공사는 다양한 공사 목적물이 존재하고 현장에 다수의 건설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시행하며 장비와 종사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작업 여건상 수많은 위험과 변수에 노출**
-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맞는 안전한 제도 정비와 건설 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

약속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안전 관리비 등)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안전한 공사 여건 마련
  -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 중지권 보장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04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현재

- **최근 고수온 등 기후변화,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등으로 연안지역 피해 증가**
- **선박 대형화 및 레저활동 증가 등으로 해상교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해상 선박사고 등 해상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가**

약속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 **연안침식에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고 방재역량 제고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해양안전교육 확대 · 강화**

05 해양영토 주권을 확실히 수호하겠습니다.

현재

- 일본, 중국 등 해양관할권에 대한 연안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 관할 해역에 관한 확실한 영토주권 확립과 관리 필요
-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민 피해

약속

-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 접경지역 인근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 지원 및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강화

06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톤을 방류하기로 발표했으나,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미진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심화
- 해양폐기물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어촌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 수거 인원 부족
- 안전한 수산물 소비, 해양 환경오염 및 재난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대책 강화 필요

약속

-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 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의 수거 · 처리 · 재활용 원스탑 플랜 수립
-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심먹거리

•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미래 식품산업 적극 육성

01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가축질병 상시화, GMO 농식품 및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최근 부실한 군 급식 및 학교급식이 이슈화되어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와 새로운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

약속

▶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
- GMO완전표시제 도입, 잔류농약 · 방사능 오염 검사
- 수입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유통이력추적제의 정착화
-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공급**

▶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본격화**

▶ **미래 식품산업 적극 육성**
-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한 밀키트, 메디푸드 등 개발 지원
-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규제 완화 추진
- 전통식품산업 진흥정책을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범죄예방·피해구제

-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구제책 마련

0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 · 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이 미흡**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보호 · 지원이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 중심의 형식적, 수동적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로 운영중**

약속

-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의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예방 – 신고 – 수사 – 법원 – 출소 · 가석방)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
  -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 강력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 · 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앱 실명 인증 강화
  -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02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현재

▶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

약속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 설치**
- 법무부 · 경찰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계획 · 시행 · 관리
- 도시공학 전문가와 범죄심리학 전문가, 건축 · 환경 · 범죄 · 아동청소년 · 상담 · 문학 · 미술 · 음악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참여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전자감독장치 훼손, 외출제한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방지

▶ **중형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 사회 복귀 전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 조치 선행

*석방조건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등 일정시간 보호수용시설에 거주하면서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방식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감경 폐지**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03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입법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현재

▶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법, 성폭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나, 형량이 가볍고 (최대 10년 6개월) 위계, 권력에 의한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 형사처벌 규정 없음**

▶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 피해자 정보 유출, 다른 구성원에 의한 회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 속출

▶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 다수 발생**

약속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설치**
-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 범죄 피해자 관련 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가해 방지

▶ **신고를 방치하거나 회유하는 관리자 처벌 규정 마련**

▶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 (양형기준)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
- (양형인자)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 마련

04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거짓말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폐해가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

약속

▶ **무고죄 법정형 강화**
–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 구별
–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 **위증죄 처벌 강화**

▶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치**
– AI 디지털 범죄피해구제 사법체계 구축

▶ **형법 개정 등**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건강지킴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
-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 지역의 부족한 응급 ·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 의료 · 돌봄 맞춤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 · 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01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현재

▶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중 재난적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에서는 정책의 후 순위**

▶ **연간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40%가 넘는 경우인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

약속

▶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의 상한선(2022년 625억원)을 1/100로 점진적 상향

–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

– 연간 지원한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02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 – 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방치**

▶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 – 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

약속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 **요양 – 간병 가족돌봄 휴가 · 휴직 기간 확대**
- 요양 – 간병 가족돌봄 휴가 · 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돌봄자의 소득손실 등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강화
  *현행 40~60%(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감면에서 추가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돌봄자에 대해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수가인정 및 휴일 또는 야간 가산 적용

▶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Care Plan)을 마련하여 지원

▶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 ·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 · 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수명 개선
-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03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기겠습니다.

현재

▶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등)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

–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약속

▶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치료 기간에 적정한 소득지원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

04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 **현재 지역 간 의료격차가 존재하고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생명보존시간(golden hour)이 필요한 심장질환과 뇌졸중, 그리고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이 존재

약속

▶ **지역 국립대병원 ·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등을 평상시에 확보해 운영

–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 ·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

▶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원 노력**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도록 개정

▶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 향상**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 운영

05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아동 ·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게는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는 이들 서비스의 제공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서비스도 병원 및 전문 진료과목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분절적임**

약속

▶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아동 ·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이 선택한 주치의 중 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

– 돌봄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 **주치의의 돌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정보센터를 운영**

06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 **암환자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신약을 고가로 직접 지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함**

– 심평원의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120일이고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기간은 60일로 전체 180일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2년여 개월이 소요

▶ **2013년 12월에 전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41개 의약품에만 적용되었고 이중 32개가 항암제임**

약속

▶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희귀 질환 포함)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

–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하여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

▶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

07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2021년 건강실태조사)**

▶ **2020년 하루 평균 36명 (연간 13,39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을 잃음**

–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25.7명으로 OECD 평균 2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최상위임

약속

▶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 대상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 운영

▶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경제활성화 | 건강한 지방자치 | 교통혁신 | 농산어촌 발전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역경제활성화

-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육성
-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 지방 과학기술 주권 시대 개막으로 지역자생력 강화
- 지역 중 – 고 – 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01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었고, 지방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
-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구축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별 초광역권만으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형성하기 어려움**
-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강소도시로 만들고, 이 강소도시들과 메가시티를 함께 엮어내는 통합적 스마트 지역개발 전략이 필요**

약속

- **강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 추진**
  -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소외됐던 중소도시를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추진
  - 초광역권 메가시티 형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 운용
  - 강소도시와 초광역권의 동시다발적인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평적 연계로 통합적 지역발전 도모
- **과학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스마트 국토관리로 지역발전 도모**
  - 국토(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IT, IoT 기술만이 아니라, 국토(도시)의 모습을 리디자인(redesign)하여 미래 국토의 비전과 형태를 개념화하고, 추진방안 제시
  - 주거, 업무, 유통, 의료, 복지, 여가 등의 기능이 복합된 거대한 Mega Building의 건설이 일반화되는 입체적 토지 이용체계로 전환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비, 인접 도시 간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네트워크 강화
  - 지역의 문화 상징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반 및 스토리텔링 강화
  - 고유의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문화가 함께 발현되는 도시재생 및 정비 강화

02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중소기업들은 혁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첨단 및 신기술로 고부가가치 창출,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 **기업의 축적된 노력에 맞춰 혁신 글로벌기업에 과감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만들어 낼 필요**

약속

▶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

–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 마련해 글로벌 혁신특구 우선지원

– 입주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 및 유턴기업에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운영

– 비수도권 클러스터 참여 국내외 선도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

▶ **기업 – 지역대학 – 정부가 공동협력하여 첨단투자 한국형 Quick Start Program 통해 맞춤형 혁신 지역인재 양성해 기업에 적시 공급**

▶ **혁신특구에 정부와 민간의 '혁신특구 펀드' 조성**

03 지방 과학기술 주권시대 개막으로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대형 국책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은 여전히 요원**

– 균특사업, 지역클러스터 육성 등 많은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역균형발전은 여전히 요원

▶ **정책 빈곤과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으로 지자체의 관심도나 혁신투자가 저조한 악순환이 반복**

약속

▶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거점대학 개방형 융합연구 지원**

– 테크노파크(TP), R&D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기술혁신과 혁신창업 지원

*전국의 국가 · 지방산단 중심으로 우선 확산

▶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 추진**

– 특성별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경우 과감한 예산 지원

– 출연연구기관의 지역특화산업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 · 채용

04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돕겠습니다.

현재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은 40,586명으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
– 2024년에는 2021년 정원 기준 입학정원의 22%(10만 8천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대에 집중 예상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재원이 자치하는 비중은 고등교육의 경우 0.6%로 OECD 평균 1.0%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

▶ **지방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폐교는 오롯이 학생들 피해로 돌아가고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지방소멸의 위기 초래**

약속

▶ **지역 중 – 고 – 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 **지방거점대학(원) 집중 지원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
– 지방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으로 지역 R&D 및 혁신 지원

▶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
–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 전환 방안 모색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지방자치

- 이주활성화지역 지정 통해 지방소멸 방지
-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통해 지역중심 문화자치시대
- 이장 · 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

01 이주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226개 중 151개 (약 67%)
- 인구소멸 위험지역 전국 지자체의 약 40%에 해당
-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쇠퇴지역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의 필요성

약속

- **가칭 '이주활성화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 **지역 이주자 사업기회특구(Business Opportunity Zone) 지정**
  –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 **정착지원 및 투자지원**
  – 인센티브 제공 (보육 · 의료 · 보건 등에 관한 특별 지원 등)

02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자치와 지역중심 문화행정 필요성 제기**
- **수도권 문화집중으로 지역은 문화 소비지가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과 창의성 저해**

약속

- **지역 중심의 지역문화 분권 및 자치 체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 기능 및 역할 재조정, 상향식 지역문화계획 추진**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 예산 확대**
-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 AI, 메타버스와 지역 중점 콘텐츠 연계·활용한 지역문화플랫폼 구축
- **4차산업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양성**
  – 지역문화 크리에이터 및 지역문화예술 4.0 스타트업 양성
  – 지역문화특구 제도 및 엔터프라이즈 규제프리존 도입
-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진흥 주도기관 지정 및 지원**
  – 4차산업 기반 지역 교육기관과 문화재단, 문화원,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 기반시설 건립·운영 확대**
  – 전국 박물관·미술관·복합문화센터 확대
  – 청소년, 중장년, 고령층 맞춤형 문화시설 조성
- **고유한 특성의 문화도시 신규 지정 육성 및 추진방향 개선**

03 통장님, 이장님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현재

- **통장, 이장의 지위와 권한 불분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규정·제도 필요**
- **농산어촌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원금 제도 개선, 적극적 수당체계 강화 필요**

약속

- **이장·통장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시행령에 단순하게 규정된 이장·통장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
  – 선임절차도 중앙정부의 예우와 지방정부의 특화 예우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화
-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
  – 농산어촌 특화발전 추진과정에서 △지역자원 조사 지원, △주민의견 수렴, △특화 마을 만들기 주도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화발전지원 수당'신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교통혁신

-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시대
- 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환승 허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으로 개발

01 1기 GTX 연장, 2기 GTX 건설로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 **수도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평균 1시간 36분 이상을 보내며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확연히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2,500만 시민들의 통행 편의와 행복 추구권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함**

약속

▶ **1기 GTX(A, B, 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 GTX – A 노선 평택 연장 : 산업단지 입지, 고덕신도시, 평택시
- GTX – C 노선 동두천, 평택 연장 : 북부 접경 도시의 지역균형개발

▶ **GTX-D노선: 수도권 남부 동 · 서 더블 Y자 연결노선**
- 김포에서 인천(원당~계양) ~ 부천(대장) ~ 부천종합운동장 ~ 서울(신림, 강남, 삼성, 잠실 등) ~ 하남(교산) ~ 남양주(팔당)로 연결
-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분기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성역에서 분기하여 경강선을 활용해 수서 ~ 성남 ~ 광주 ~ 이천 ~ 여주 연결

▶ **GTX-E 노선: 수도권 북부 동 · 서 연결노선**
- 인천(검암, 계양) ~ 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내) ~ 구리 ~ 남양주(다산, 양정) 연결

▶ **GTX-F 노선: 수도권 거점도시(경기) 순환노선**
- 고양 ~ 서울 ~ 부천 ~ 시흥 ~ 안산 ~ 화성 ~ 수원 ~ 용인 ~ 성남 ~ 하남 ~ 남양주 ~ 의정부 ~ 양주 ~ 고양

▶ **GTX 노선을 따라 콤팩트 시티 건설**

02 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 **인구 과소지역은 버스와 철도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경제성이 없는 버스노선 폐지로 교통사각지역 발생**
–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저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수

▶ **대도시권 도심지역은 도로·철도 등의 추가 건설에도 불구하고 지상 교통망의 혼잡이 지속되어 3차원 교통수단 도입 필요**
– 편리 · 안전 · 신속 등 다양한 가치에 중점을 둔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서비스의 확대로 항공모빌리티(UAM) 확대 적용 전망

약속

▶ **교통소외지역 ZERO를 목표로 어디에 살든지 생활용품 판매시설, 병원, 행정관청 등에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최소 생활 교통서비스 제공**
– 거주 지역별 최소교통서비스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 네트워크 구축
– 공익서비스의무(PSO)를 위한 수요대응형 공영버스 제공
– 마을 택시(100원 택시), 무료 순환셔틀버스 제공 등

▶ **수도권 항공모빌리티(UAM) 테스트베드에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
– 인천공항 ~ 여의도 ~ 강남권

▶ **교통 핵심 지점을 중심으로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및 복합환승 체계 도입**
–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03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환승 허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 **전국 165개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 휴게 기능 위주로, 인근지역과 단절되어 지역 교통체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이점이 사장**

▶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이동을 위한 도로와 철도 교통의 연계 체계가 거의 없음**

▶ **버스와 철도 환승 불편 등으로 대중교통 경쟁력이 낮아 지역 간 교통에 승용차 이용이 과다하여 교통혼잡 등 사회비용 증가**

약속

▶ **인접 지역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고속도로 진 · 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 스마트 IC 설치를 확대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임**
–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하이패스 Gate 설치 확대로 인접 국도 · 지방도로 진 ·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접근 수혜지역 확대 및 지 · 정체 시 교통 우회 분산 기능 수행

▶ **고속도로 진 · 출입이 가능하게 한 휴게소 인근지역에 열차역(KTX 등)이 위치하는 경우, 철도–도로 연계 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속 · 시외버스–고속철도 · 열차 간 연계 환승 서비스 운영**
– 고속버스, 시외버스, 지역버스, 택시, 승용차, 고속철도 · 열차 등 교통수단 간 유연한 환승 서비스 기능 추가로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대중교통 노선 환승의 자유 확대

▶ **휴게소와 연계된 환승시설에는 지역특산물 판매, 인접 지역관광 · 레저 연계, 권역별 교통사고 대응 의료시설 등 국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합타운으로 개발**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특산물 시장형성,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농가 수입 증가, 부가가치상승 등 지역 균형발전 도모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산어촌 발전

- 농업직불금 확대해 중소가족농을 두텁게 지원
-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 경감
- 의료 · 교육 ·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철저 예방
-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01 농업직불금과 예산을 확대해 중소가족농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농업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이 17%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예산 제약 및 제도 미비로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
- **현재 선택직불제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다양화 필요**

약속

-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확충**
-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예산 확대**
  – 고령중소농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최대 10년 지급
  –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도입
- **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
- **농가인구 비중과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걸맞게 농업예산 확대**

02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현재

▶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

▶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 디지털로의 전환 가속화는 기술적 · 재정적 ·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과 도심 지역과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약속

▶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추진**
-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통해 유통비용 대폭 절감
- 농산물 수집 – 선별 – 포장을 자동화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 농업데이터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농산물 정보 디지털화
-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지원

▶ **디지털 · 스마트 농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디지털 농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농업분야 R&D 투자 확대
- 밭 농업 기계화와 밭 기반 정비의 적극 추진
- 스마트 농업용수 제어 · 관리 시스템 구축

▶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스마트 농기계 보급 확대**

▶ **정보통신(ICT) · 생명공학기술(BT)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 **탄소중립적 농업과 농촌 환경보전 적극 추진**
- 농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 보급
-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지원 확대
- 영농폐기물 처리 강화

03 농지보전을 통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약 20%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이에 반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52배에 달하는 농지가 전용되는 등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지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

약속

▶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 기초식량 비축량 2개월 → 3개월,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 공공 식량비축시설 현대화 추진

▶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 일원화**

▶ **농산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

04 농어민들의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현재

- **코로나19로 수출감소,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농산물 판로가 좁아지고 외국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심각**
- **가축질병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곡물값 상승, 채소류 등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확대, 각종 원자재 및 경영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약속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지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가에 공급
  -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비자 연장
  - 파종기 및 수확기에 한해 외국인 근무처 변경 허용
-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의 영농법인, 창업활동 적극 지원
  - 다문화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 농 · 수협 비과세예탁금 한도 확대 및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 폐지로 수입농산물 피해 농가 지원**
-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시장위험관리의 지원 강화**
- **농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보상범위 현실화**
- **특별재난지역 농수산물 · 가축 피해 지원 확대**

05 의료 · 교육 · 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농어촌 고령화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불균형 심화. 고령농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46.6%, 농어촌 의료기관수 도시의 13%에 불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문화생활 기반 부족 등 문제 심화
-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경우 농업인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 발생**

약속

-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 **농어촌 지역 병원에 필수의료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 **농어촌 공간계획의 수립**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및 우수교원 및 방과후강사 유치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도시 ~ 농어촌 학교 간 원격 공동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원격강좌 운영
-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
  -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농기계 개발 · 보급
  - 여성농업인 안전바우처(안전장비 구매 등)지원
- **영농도우미 및 농어촌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 **농어업인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 개발 · 보급, 국민연금 가입률 및 보험 납입금 확대**

06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가축전염병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현재

-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짐
- 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축산인력난으로 축산경영의 불안정성과 수익성 악화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의 상시화로 축산농가 어려움 가중 및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

약속

-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및 ICT기반 가축 사양관리 강화**
  - 축산 빅데이타플랫폼 조기 구축
  - 축산악취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무인축산시스템, 미래형 축산기술, 사육기간 단축 등 연구개발 지원
-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 가축 살처분 농가의 피해보상 현실화
- **사료가격 안정화 등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비 지원 확대
  -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 및 축산자조금 사업의 강화
  - 사료업체의 민간 비축량 확대
-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구축**
  -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 저탄소사료와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 · 보급

07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 귀어 인구는 귀농 · 귀촌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그마저도 노동환경, 어업기반 구축 등의 제약요인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
- 도서지역을 포함한 어촌지역 생활 · 복지 인프라 구축, 유휴시설 및 빈집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등 어촌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약속

-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주민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어촌 · 수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
- **연근해 어업의 어패류 자급률 제고와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
  -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병원 확대, 이동형 원격진료 지원 등
- **청년 어업인 정착을 위한 주택 · 자금 · 어업기술 종합지원 확대**



국정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혁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사법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혁신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 여성가족부 폐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
-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01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
-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
  ⇒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필요

▶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
- 現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
  ⇒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 필요

약속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 대통령실 '정예화 한 참모'와 "분야별 민 · 관합동 위원회"로 조직개편
- 공무원 및 민간 최고 인재, 해외 교포, 경륜 있는 중장년층, 패기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 참여
- 국정운영 참여 민간인에 대한 윤리 · 감시체계 마련

▶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조직으로 재편**
- 대통령실은 범부처 · 범국가적 현안 기획 · 조정 · 추진,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

▶ **총리 및 장관 자율성, 책임성 확대**

▶ **세종 제2집무실 설치**

▶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
- 대통령과 공무원, 민간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공간 재구성
-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

▶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과 공간적 분리 및 이전**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의 품으로**
-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02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 **과거에 비해 성평등 · 성역할에 대한 세대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정책 중심 타 정부 조직과 달리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여성가족부 포괄 업무는 오히려 타 부처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근본적으로 평등 의식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문화 확산 필요**

약속

-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

03 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훼손. 예산이 정치화되면서 정상적인 재정 운용 불가능**
  – 집권 5년 만에 재정지출 51%, 국가채무 408조원 폭증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IMF) :
  2016년: 41.2% → 2021년: 51.3% → 2026년: 66.7%
-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전체예산 대비 의무지출 비중(NABO, 국회예산정책처) :
  2020년: 46.9% → 2030년: 55.4% → 2050년: 60.2%

약속

-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 혁신 방안 마련
- **재정 여력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
  – 범정부적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수립해 제도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01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명은 사회 · 경제 · 문화 및 산업계를 넘어 정부의 변화도 요구**
-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속도는 지체되고 부처별 칸막이로 소통 난망

▶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 필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

약속

▶ **국정 운영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 · 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
- 대통령 직속 민 · 관 과학기술위원회(연구자 · 개발자 · 기업현장 전문가 · 과학기술 행정가 등) 신설
- 정책 · 제도 입안시 국민 수요조사,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 시스템화
- AI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세계 표준 행정 AI 시스템이 되도록 최적화
-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마련
- 국가 통계의 독립성 확보 및 공공부문 디지털정보 공유기반 구축

▶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 대전환**
-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력하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

▶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 구축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중장년 · 노년층을 위한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 · 역동적 디지털혁신 추진 및 규제 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법개혁

- 전문법원 설치 확대를 통한 국민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
- 국민의 법무 · 검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실현
- 공수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으로 정상화
- 경찰 처우개선 통해 치안 역량 강화
-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설립
-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01 전문법원 설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소년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연인폭력 등 아동 · 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사법체계 개편 필요**

–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는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동 · 가족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역할 또한 미흡

▶ **해사분쟁과 해양 사고의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매년 4,000억원 이상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약속

▶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 소년보호사건 · 소년형사사건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연인폭력 등 아동 · 가족관련 사건 통합처리, 임시조치 활성화

–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상담 · 치료 · 지원 · 후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 **해사전문법원 신설**

– 해사전문가 법관으로 구성

–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는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처리

02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무 · 검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 **파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국민적 요구**

– 현정권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 초래

약속

▶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방지

– 「검찰청법」 개정

▶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

03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현재

▶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 사찰식 불법수사, 무능수사로 인하여 공수처 폐지 여론 형성**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

–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 상실

– 무차별적 통신조회 등으로 인한 불법 사찰 시비,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인하여 공수처 폐지 여론 심화

약속

▶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폐지

–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 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 수사를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 ·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

04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대**
– 2021년 11월 15일 인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 현장에서 무장경찰관이 도망가고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 발생

– 경찰이 범죄현장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범인 제압과정에서 경찰이 다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있음

– 범죄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약속

▶ **순경 출신 경찰관,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 대통령 임기 말까지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20% 이상 배치해 인사 불공정 해소

– 승진 제도를 개선해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

▶ **경찰(해양경찰, 소방 포함) 공안직화**
– 다른 공안직과 동일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 경찰 사기진작 통한 치안 활동 강화

▶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 범죄수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의 온전한 보상 추진

05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현재

▶ **중앙 및 지방에 설치운영 중인 행정심판기관 50개 초과**

▶ **절차 운영이 각각 달라서 국민의 이용 불편 및 인력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 초래**

▶ **처분청의 상급기관 소속 설치로 일부 특별행정심판은 독립성과 객관성 결여**

▶ **재판 보다 미약한 국민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으로 국민의 이탈감이 높은 편임**

약속

▶ **국민의 ONE-STOP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 실현

▶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심판을 위해 기구 독립성, 위원 전문성, 절차 투명성 강화**
– 법관에 준하는 위원의 신분 보장과 심판의 독립성 보장
– 법률, 조세, 회계, 의료, 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위원자격 개방으로, 행정청 일변도를 탈피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강화
–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참여권 보장, 심판 과정의 공개 확대 추진

▶ **국민편의적인 조정 활성화를 통한 국민고충처리의 실질화**
– 행정심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방안의 실질적 확대
– 국민고충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

06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립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법률구조 기구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들은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조차 파악 어려움**
- **한정적 자원에 비해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불가**
-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기관 재정비 필요**

약속

- **'종합법률구조기구'의 신설**
  – 수많은 법률구조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신설
-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 각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 종합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 및 변호사와 연결되는 모든 절차를 해결
  – 지역의 특색에 따른 맞춤형 법률구조의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
  –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행복정책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지원확대



위기 DOWN!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쉬어가시오

반려동물 쉼터 확대





전기차 충전!
동네 주유소에서도



전사자·순직자 명예진급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



싱크홀 방지 예산 대폭 확대!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으로 해결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복지 누린다

생활 UP!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쉬어가시오

전체 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폐지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설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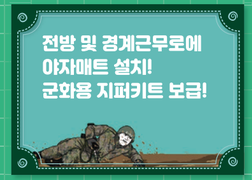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STOP!





전방 및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 설치!
군화용 지퍼키트 보급!



선생님 업무부담은
줄이고, 아이들 학습권은
지키고



스포츠팀 창단·운영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흡연갈등 이제 그만!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



중증질환 및 희귀암
건보적용 확대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아이들 도서관 책
대출 시,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



폐기물은 줄이Go,
회수율은 높이Go,
국민은 편하Go!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



나를 위한 생활정책이 쏟아지는

심쿵약속

약속해요!



토익,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농어촌



어르신 건강증진·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충!



이직해도, 퇴사해도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할 때 직접·즉시 발급!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



입영 대기시간 ZERO화,
수요자 중심 병무행정
전환



낚시·여가 특구 추진 및
여가 편의시설 확충!



초등 방과후학교
스포츠활동 강화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문진표 및
의료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음주운전 적결에
주세 활용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산 확대!



행복 UP!

공공시설 내 유모차·휠체어
'살균 소독기' 설치



군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개선·복원

나를 위한 행복
START

불편하고 답답했던 생활정책

국민 안심 59초 쇼츠 처방전 +

쇼츠 처방전으로 진료 해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Change!

-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 지하철 정기권, 버스에서도 사용가능
-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
- 반려묘 등록 의무화



나를 위한 정책으로 내 삶이 Up!

-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혜택
- 영문 PCR 검사, 최소비용 발급
-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비용 지원
- 보육시설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



가족 맞춤 정책으로 온가족이 Happy!

- 택시 안전 시스템 장착 의무화
- 스쿨폴리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 번호판으로 구분
- 시외 · 광역 고속버스도 휠체어 탑승 가능
-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 워킹맘, 워킹대디 자녀와의 시간 보장
-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따뜻한 나눔 정책으로 다함께 Smile!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 디지털 약자층을 위한 키오스크 공약
-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
-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 안전속도 5030 개선
-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 중장년층을 위한 청춘공간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힘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포인트테크 I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64 02)2263-4070~2